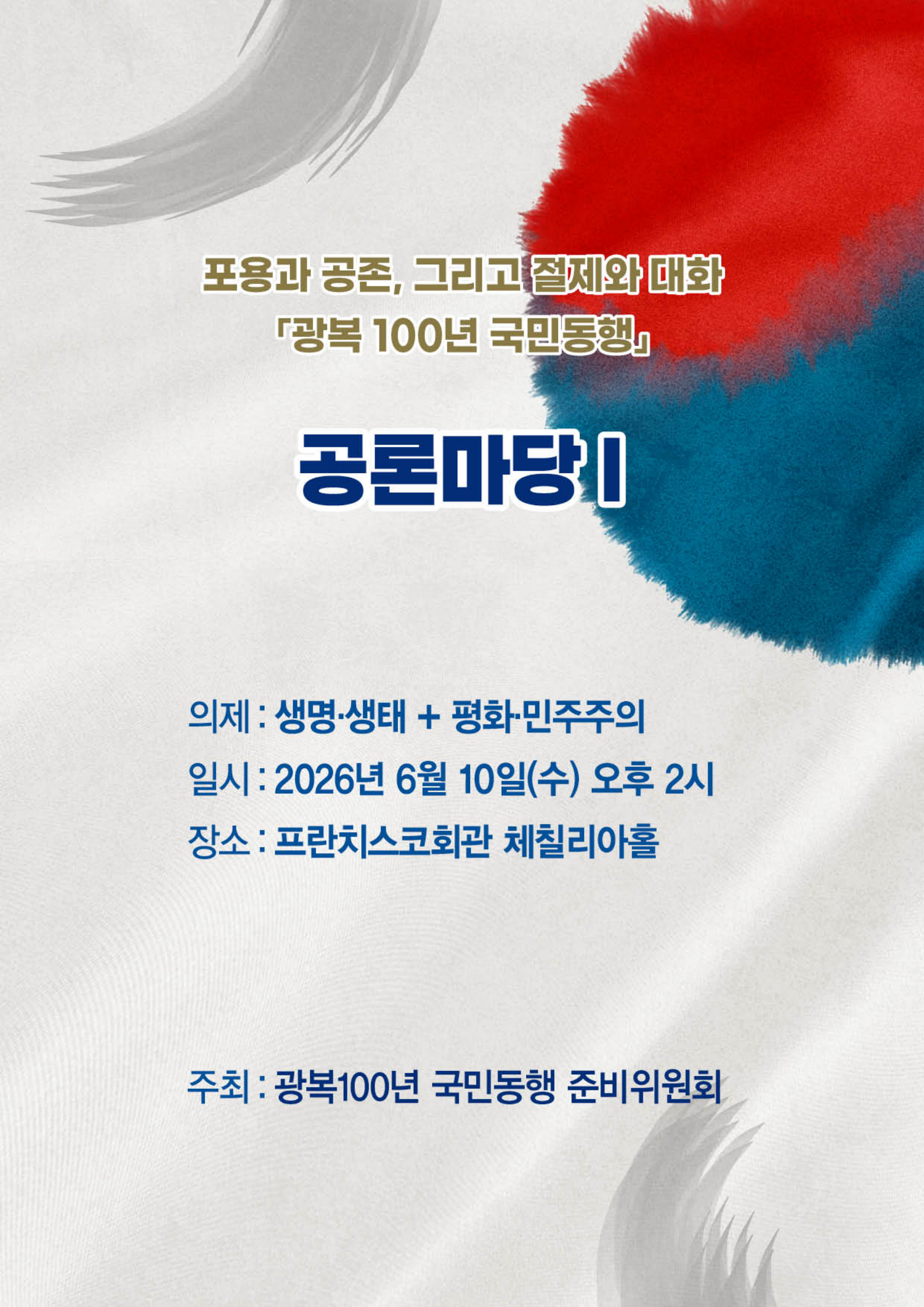




포용과 공존, 그리고 절제와 대화
「광복 100년 국민동행」

공론마당 I

의제 : 생명·생태 + 평화·민주주의

일시 : 2026년 6월 10일(수) 오후 2시

장소 : 프란치스코회관 체칠리아홀

주최 : 광복100년 국민동행 준비위원회



포용과 공존, 그리고 절제와 대화
「광복 100년 국민동행」

공론마당 I

의제 : 생명·생태 + 평화민주주의

일시 : 2026년 6월 10일(수) 오후 2시

장소 : 프란치스코회관 체칠리아홀

주최 : 광복100년 국민동행 준비위원회

행사 프로그램

일시 | 2026년 6월 10일 오후 2시

장소 | 프란치스코회관 체칠리아홀

14:00 – 14:10	10분	개회
14:10 – 14:30	20분	발제 – 생명·생태, 정규호 박사(생명학연구회 부회장)
14:30 – 14:45	15분	생명·생태 의제에 대한 세대별 지정토론 - 유정길 녹색불교연구소 소장 - 한윤정 녹색연합 공동대표 - 장윤석 녹색연구활동가
14:45 – 15:15	30분	생명·생태 의제에 대한 전체토론
15:15 – 15:25	10분	휴식
15:25 – 15:45	20분	발제 – 평화·민주주의, 박명림 교수(연세대, 정치학)
15:45 – 16:00	15분	평화·민주주의 의제에 대한 세대별 지정토론 - 박은정 이화여대 명예교수(법학) - 박준규 한반도청년미래포럼 창립자
16:00 – 16:30	30분	평화·민주주의 의제에 대한 전체토론
16:30 – 17:00	30분	평화·민주주의 / 생명·생태 의제에 대한 전체 토론 및 정리

의제 1

생명.생태

발제

생명·생태를 시대적 가치로 삼아 광복 100년을 준비해 나가자

정규호 (생명학연구회)

0. 시작을 위한 질문과 주장

[질문]

- ‘광복’의 본래 의미는 무엇이며, 이것이 오늘날 제대로 발현되고 있는가? 광복 100년의 시대적 의미는 무엇 일까?
- ‘비상사태’, ‘대량멸종’ 등 생명·생태 위기의 위급성과 심각성에 대한 경고들이 쏟아져나오는데 현실의 변화는 왜 더디고 미진한가? 예견된 재난에 대한 사전예방적 대응이 부실한 가운데, 시민의 참여와 권한 확대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 ‘미래’에 대한 시간 감각이 빠르게 사라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속가능한 미래를 어떻게 인식하고 준비해 나갈 수 있을까?

[주장]

- 대다수 사람들이 지금도 익숙한 채 의지·의존하고 있는 가치와 생활양식, 제도, 시스템 자체에 생명·생태 위기의 원인이 자리하고 있다면, 이 문제에 대한 진단과 접근 방식 자체를 전면적으로 바꿔내야 해결의 실마리도 비로소 보일 것이다.
- ‘광복 100년’을 20년 후의 다가올 미래로 놓고 예견하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20년의 미래 시간 감각을 갖고 지금 현재의 인식과 삶의 태도, 의사결정 기준, 사회구성 원리를 바꿔내는 실천적 태도가 중요하다. 생명·생태 가치는 이를 위한 진단과 모색의 의미 있는 준거가 된다.

1. ‘광복’(光復)의 시대적 의미를 확인하며

“2045년 ‘광복 100주년’은 역사적 사건에 대한 단순한 기념의 차원을 넘어서, 모든 생명 존재들이 더불어 평화롭게 살아가는 ‘나라’, 지속가능한 ‘삶’과 ‘문명’을 위한 사회적 약속이자 선언의 시간이 되어야 한다.”

- 해방 당시 ‘광복’은 식민 지배로부터 ‘주권 회복’의 의미가 컸다.(光復~解放~獨立) 하지만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제국주의의 약육강식 논리가 지배하던 상황에서도 독립운동 선조들이 꿈꿨던 ‘광복’은 국가 독립만이 아니라¹⁾, 인간 존엄과 공존, 평화의 보편적 가치가 적극적으로 구현되는 ‘나라 만들기’였다.
- ‘3·1운동 선언서’에서 우리 민족은 물론 인류 전체가 평등하게 함께 누리는 삶, 공존의 사회 원리를 강조
 - » ‘전인류 공존 동생권(共存 同生權)’, ‘동양평화(東洋平和)’, ‘세계평화(世界平和)’, ‘인류행복(人類幸福)’ 등
- 김구 선생의 『백범일지』에서 우리 자신은 물론 남도 행복하게 하는 높은 문화의 힘을 가진 나라에 대한 소망을 밝힘
 - »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다. …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겠기 때문이다”²⁾
- ‘헌법 전문’에 공존, 평화, 지속가능성 실현을 국가의 존재 이유로 밝힘
 - »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³⁾
- 그런데 오늘날 한국 사회 현실을 보면, 이러한 광복의 본래 정신이 충분히 발현되고 있는지 근본적으로 되돌아보게 된다.
- 고도성장과 민주화의 성과를 압축적으로 달성했지만, 세계 최저 수준 출산율, 높은 자살률, 극단적 경쟁과 불신·갈등·혐오, 정신적 고립과 집단적 우울감이 심화되고 있음
- 여기에다 ‘제6차 대멸종’, ‘기후위기 비상사태’ 등 생태적 위기의 확대는 생명 가치가 존중받지 못하고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음을 보여줌

1) 구(舊) 체제의 복원은 더욱 아니다.

2) 김구 저, 김학만·이병갑 주해, 2016, 『(정본) 백범일지』(학민사), 430-431쪽.

3) 해당 내용은 48년 헌법 제정 이후 지금까지 변함없이 지속되고 있다.

- 지금과 같은 상태가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고 그대로 지속되면, 향후 20년 내(2045년) 생명 경시 현상과 생태학적 재난은 훨씬 더 심해질 것이고, 인간으로서 자유와 존엄은 물론 생명계 전체의 생존 자체가 근본적으로 위협받을 것으로 보임
- 광복 100년을 내다보면서 우리가 밝혀내야 할 ‘광복’의 의미는 정치적 국가 독립의 차원을 넘어서, 함께 행복한 공존의 원리를 민족과 인류에서 못 생명과 생태계 차원으로 확장함으로써 생명·생태 가치가 존중되는 삶과 사회, 문명 실현에 있다.
- 지난 시절 ‘광복’이 ‘무엇으로부터’ 해방의 의미라면, 이제는 ‘무엇을 향한’ 즉 어떤 삶, 사회, 문명을 만들 것인가에 대한 가치 지향적 의미를 적극 담아내는 것이어야 함
- 생명·평화의 DNA를 내장하고 있는 한민족 정신문명의 빛나는 가치를 시대에 맞게 되살려서, K-culture가 보편성을 획득해 가는 시대에 걸맞게, 생명·생태 가치를 바탕으로 한 공존·공생·상생의 원리를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나아가 사회와 나라, 문명의 원리로 연결, 확장시켜낼 필요가 있음

2. 돌아보기 - 지난 80년 사이(1945~2026) 어떤 일이 있었나?

- 일제의 식민 지배와 참혹한 전쟁을 겪으면서 세계 최빈국, 원조 수혜국이었던 우리나라는 짧은 기간 동안 압축적인 성장을 통해 고소득, 고학력, 고기술을 갖춘 선진 국가로 발전했다. 또한 군사독재 시절을 지나 시민사회의 활력에 기반한 민주주의의 모범 국가로 자리 잡았고, 세계적으로 문화를 선도하는 국가가 되었다.
- 그러나 한편으로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과 높은 자살률, 급속한 고령화, 양극화⁴⁾⁾와 불평등(소득·자산·세대·성별·지역 등)의 심화와 복합적 갈등 구조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산적해 있다. 저성장의 고착화, 불안정 노동, 주거 불안(부동산 격차 확대) 등도 심각한 문제다.
- 특히 우리나라는 매년 약 1만 5천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음으로써 OECD 회원국 중 자살률이 가장 높음
- 자살률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로, 인구 10만명 당 2017년 24.3명에서 2020년 25.7명, 2024년 29.1명으로 나타나, OECD 회원국 평균의 2배를 넘음

4)) 사회경제적, 공간적 양극화에 더해 심리적 양극화가 확대되면서 민주주의 토대인 다양성이 질식되고 공화(共和)의 가치가 훼손되면서, 공존·공생·상생의 기반이 무너지고 있다.

- 10대부터 30대까지의 사망원인 1위가 자살이었는데, 통계청의 '2024년 사망원인 통계 결과'를 보면 처음으로 40대 사망원인 1위도 자살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음
- '당장 어렵고 고생스럽지만 보다 나은 미래가 기다릴 것'이라는 믿음이 개발연대 시절의 어려움을 인내하는 힘이 되었는데, 경제성장과 민주화 국면을 거치면서 오히려 '미래'에 대한 희망과 낙관적 믿음에 균열이 일어나고 해체되고 있다.
 - 60~70년대 : '절대 빈곤으로부터 탈출'에 대한 집단적 염원을 바탕으로 개발국가 체제가 작동
 - » '국가 총량적 성장 = 국민 행복 보장'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사회적 자원을 동원하고, (노동, 인권, 환경 등) 희생과 헌신을 정당화함 ("조국 근대화", "우리도 한 번 잘살아보세", "하면 된다")
 - 80~90년대 : 정치적 민주화, 경제적 개방화, 올림픽 개최, 선진국가 진입(96' OECD 회원국)과 함께, 자유 경쟁과 경쟁력이 시대적 가치로 자리(경쟁국가, 추격국가 모델이 작동)
 - » 개방화, 효율화, 생산성에 기반한 세계 속 경쟁력 강조 ("세계 일류", "신한국", "삶의 질", "선진사회" 등)
 - 97년 IMF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 등을 거치면서 공동체적 관계(가정, 직장, 지역사회 등)가 무너지고, '지금 고생해도 미래는 보장받지 못하고 언제든 밀려날 수 있다'는 불안감 확대
 - » 구조조정과 평생직장 개념 붕괴 속에 '미래'에 대한 희망적 믿음이 무너지고, 생존 불안감 확대("고통분담", "경쟁력 강화", "자기개발")
 - 2010년대부터 시작해, 2014, 세월호 참사,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거치면서 특히 청년 세대를 중심으로 '미래'에 대한 비관적 담론이 확산되기 시작함
 - » 미래 보장 수단의 이동(공부, 노동소득, 저축 → 부모 자산, 부동산, 주식), 계층 상승 경로 차단(개천에서 용 나기 어려운 현실), 노동시장 이중구조 확대(정규직(대기업vs중소기업)과 비정규직 간 격차 확대)
 - » 구조적 저성장, 코로나 팬데믹 충격, 플랫폼 노동 확대, 부동산 가격 급등, 자산 격차가 확대로 "부모세대의 삶의 표준을 자신들에게 적용할 수 없다"는 인식과 함께,⁵⁾ 미래를 상상하고 장기 계획을 세우지 못하면서 청년들의 불안과 불만이 커짐. ("헬조선", "이생망", "수저계급론", "N포세대", "영끌"(부동산, 주식, 코인) 담론의 확산, 일부 청년 세대의 극단화, 극우화 현상 등장)

5) 퓨리서치센터(Pew Research Center)의 2022년 8월 11일자 자료를 보면 한국인 약 60%가 "다음 세대가 부모보다 경제적으로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3. 내다보기 - 향후 20년(2045, 광복 100주년) 동안 어떤 변화가 있을까?

- 과학기술 영역의 엄청난 혁신 속도가 상당한 변화를 가져다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희망적 기대와 우려의 시선이 공존하고 있다.

- 신기술(인공지능·로봇·양자나노기술·바이오기술·지구공학 등)을 통한 생산성 향상과 위험 노동 대체 등의 긍정적 효과와 함께, 노동력 대체(실업), 불평등 심화, 인간의 창의성과 비판적 사고력 약화(‘뇌 썩음’ 현상), 기술 오용(군사기술 등)에 대한 우려 또한 만만치 않음

- 세계경제포럼(WEF)은 <2026년 글로벌 리스크 보고서>⁶⁾⁾를 통해 ‘위태로운 현재’와 ‘암울한 미래’를 진단하고 있다.

- 세계는 지금 ‘절벽 위에서 (간신히) 균형’을 잡고 있다고 진단
 - » 전략적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경쟁과 전쟁으로 혼란과 분열이 가중되고, 오랫동안 안정을 뒷받침해 온 규칙과 제도들이 위협받고 있는 가운데, 지구적 공동 과제(기후, 테러, 팬데믹 등)가 부상하고 있으나, 글로벌 리더십의 부재로 문제 해결 역량은 갈수록 취약해짐 (신뢰·협력 기반 다자간 체제 → 경쟁·대립의 다극 체제)
- 10년 후(2036년) 세계는 ‘절벽 끝’으로 갈 가능성이 높음
 - » 응답자의 2/3가 10년 후 미래가 ‘불안정’, ‘격동’, ‘폭풍’ 상태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음. 미래를 ‘폭풍’ 상태로 전망하는 비중이 장기로 가면서 2배 이상 증가(8% → 19%)

<단기(2년)와 장기(10년) 지구적 전망>⁷⁾⁾

구분	폭풍(stormy)	격동(turbulent)	불안정(Unsettled)	안정(stable)	평온(calm)
단기(2년)	8%	42%	40%	9%	1%
장기(10년)	19%	39%	32%	10%	1%

※ 참고: ‘폭풍’(전 지구적 재앙의 위험이 임박함), ‘격동’(대격변 및 전 지구적 재앙 발생 위험 증가), ‘불안정’(일부 불안정, 전 지구적 재앙 발생 위험 증가), ‘안정’(국지적 혼란, 전 지구적 재앙 발생 위험 낮음), ‘평온’(전 지구적 재앙의 위험이 미미함)

6)) 학계, 기업, 정부, 국제기구 및 시민사회 분야의 세계 전문가 1,300여 명으로부터 변화하는 글로벌 리스크 환경에 대한 응답 내용을 분석 정리했다. (World Economic Forum, 2026, *The Global Risks Report 2026*, 21st Edition.)

7)) <2026년 글로벌 리스크 보고서> 7쪽 내용을 바탕으로 재정리함.

- 10년 후 예상되는 10대 리스크 중 절반을 ‘환경’ 관련 이슈가 차지하고 있는데, 이런 경향은 20년 후(2045년)에도 별로 달라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10년 후(2036년) 글로벌 리스크 순위 전망〉⁸⁾

순위	1위	2위	3위	4위	5위	6위	7위	8위	9위	10위
내용	극한 기상 이변	생물 다양성 상실 및 생태계 붕괴	지구 시스템의 중대한 변화	허위 및 잘못된 정보	인공 지능 기술의 부정적 결과	자연 자원 부족	불평등	사이버 보안 취약성	사회적 양극화	오염
범주	환경			기술		환경	사회	기술	사회	환경

- 특히 ‘기후위기 비상사태’는 핵심 변수로, 현재 상태로는 20년 후에 지금보다 폭염, 산불, 홍수, 가뭄, 해수면 상승 등 생태학적 재난이 훨씬 더 심각해질 가능성이 높고, 이것이 미래세대의 자유와 존엄, 생존 자체를 근본적으로 위협할 전망이다.

- 유엔환경계획(UNEP)의 〈2025년 배출격차 보고서〉는 향후 10년 내에 지구기온이 산업화 이전 수준보다 1.5℃ 이상 상승해, 극한 기상 현상이 더욱 극심해질 것으로 봄
 » 2025년 1월 세계기상기구(WMO)는 보고서를 통해 24년 지구 평균기온이 산업화 이전 시기보다 1.55도 상승해 기후 재앙을 막고자 설정한 한계선 1.5도를 처음 넘어섰다고 밝힘. 이런 현상은 앞으로 더 자주 발생해 기후 위기의 임계점이 더욱 앞당겨질 전망이다
- 기후·생태 위기로 인한 재난과 분쟁, 기후·생태 난민의 급증⁹⁾은 민주주의·인권·생명·평화의 가치를 근본적으로 위협하게 됨. 특히 기후 재난의 영향은 식량 생산 시스템의 파괴로 이어져, 인구 부양을 위한 생태 시스템이 붕괴 될 것을 우려하고 있음

- 기후 문제와 함께 ‘제6차 대멸종 시대’(sixth mass extinction)로의 진입도 확실시된다.

- 멸종의 원인이 자연적 요인에서 인위적 요인으로 빠르게 이동해 오고, 야생동물 멸종 속도가 100배 이상 빨라지는 등 생태학적 아포칼립스(apocalypse)가 현실화 되고 있음

8) 〈2026년 글로벌 리스크 보고서〉 9쪽 내용을 바탕으로 재정리함.

9) IEP(Institute for Economics & Peace)에서 발간한 ETR 보고서(Ecological Threat Register 2020)는 2050년까지 10억 명 이상이 낮은 회복력 상태로 생태적 사건의 충격을 견디기 어려운 지경에 놓이게 되고, 이것이 대규모 인구 이동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세계은행의 Groundswell 보고서는 2050년까지 최대 2억 1,600만 명의 기후 이주민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멸종은 유전자의 소멸만이 아니라, 생명이 살아가는 하나의 세계, 관계망, 시간성이 붕괴하는 대사건인데, 이런 생명 세계의 ‘조용한 붕괴’(silent unraveling)를 제대로 인식하고 대응하지 못하고 있음

- ‘자연 생태계’의 변화와 함께 한국 사회는 ‘인구 생태계’의 급격한 변화도 함께 겪을 전망이다.

- 통계청 자료¹⁰⁾⁾에 따르면, 한국 사회는 앞으로 총인구 감소, 출생아 수 장기 감소, 생산연령인구 급감, 고령인구 비중 급등 추세를 통해 인구구조 및 구성에 커다란 변화가 예상되며, 이것이 사회·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킬 것으로 보임

» 총인구는 2024년 약 5,175만 명 수준까지 오른 뒤 감소세로 전환해, 2040년 5,006만 명, 2050년 4,711만 명으로 줄어든 것으로 전망. 2100년에는 2,439만 9천 명 예상

» 인구성장률(전년 대비 인구증가율)은 2025년 이후 10년간 연평균 -0.16% 수준이 될 것이며, 이후 감소세는 더 커질 것으로 전망

»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2025년 20.3%에서 2040년 34.3%, 2050년 40.1%로 크게 높아질 전망

» 생산연령인구(15~64세 인구) 구성비는 2025년 69.5%에서 2040년 58%, 2050년 51.9%로 계속 줄어든 전망

» 이에 따라 총부양비(생산연령인구 100명당 부양 대상 연령층 비중)는 2025년 43.9%에서 2040년 72.4%, 2050년 92.7%로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 한편, 인구 구성 비율의 변화는 정치적 성향의 이동을 동반할 가능성이 높음

» 가장 많은 미래 시간을 가졌지만 미래에 대한 희망을 발견하지 못한 청년세대의 실망과 분노가 정치적 보수화 현상으로 나타나는 가운데, 이런 경향이 지속되면 20년 후 이들이 사회의 중심(40~50대)을 차지하게 될 것임. 반면에 현재 기준으로 진보·개혁적 성향이 상대적으로 강한 40~50대가 60~70대가 되면서 고령층의 탈보수화 경향이 커질 수도 있음. 하지만 유동층·무당층·중도층을 아우르는 새로운 정치 담론과 지형(제3지대)이 출현하면 지금과 같은 세대간 정치 성향 이동도 확연히 달라질 것임.

4. 살펴보기(1) - ‘미래 인식 상실’과 ‘내부 분열’ 상태에서 맞게 된 생명·생태 위기

- 지금 우리는 ‘미래 인식의 상실’, 즉 현재보다 더 나은 미래에 대한 인식과 기대가 빠르게 사라지는 시대에

10)) 통계청, 2023, 「장래인구추계: 2022~2072년」 보도자료.

살고 있다.

- ‘미래는 끝났다’(the future is over)는 인식의 확산은 우리는 물론 세계적 현상이기도 함
 - » 성장·발전·진보·혁명을 지향하며 안정되고 예측과 계획이 가능한 ‘열린 미래’ → 정체·불안·쇠퇴·파국의 상황에서 일상화된 위험을 견디고 살아가는 ‘닫힌 미래’
- 미래의 보다 나은 삶에 대한 약속이 무너진 상태에서 각자도생 속에서 살아남고자 자신이 가진 생명력을 지속적으로 소모시키고 있음
 - » 미래 전망과 상상력이 사라진 자리에 피로와 우울, 불안감이 자리하고, 일상화된 위험 속에서 무너지지 않고 버티고 견뎌내는 것이 삶의 목표가 되면서, 장기적 안목으로 계획하고 준비하고 노력하고 인내하기 보다 즉각적인 소비와 위안을 찾게 됨

- 외부의 힘에 의해 파괴되는 외파(外破)보다 안에서 스스로 무너지는 내파(內破)가 공동체와 민주주의, 생명의 더 큰 위협이 되고 있다.

- 식민 지배와 군사통치 시절 ‘외부’의 실체적 권력이 인간의 존엄과 자유를 억압했다면, 지금은 대다수 사람들이 믿고 의지하는 사회 시스템 ‘내부’로부터 생명력을 소진시키는 비인간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외세가 주체의 자율적 사고를 통제했던 시대와 달리, 지금은 자본과 플랫폼의 영향력 아래 반지성주의가 우리의 인식을 지배하면서, 정신적 식민화·황폐화, 심리적 내전 상태를 만들어내고 있음
 - » 복합 갈등(세대·지역·이념·계층·성별 등) 속에서 동료 시민들과의 신뢰와 연대의 자리를 불신과 혐오가 차지하고 있음
 - » 가짜뉴스, 확증 편향, 혐오와 선동, 탈진실, 극단주의가 세력화하는 가운데, 현실 정치와 시민사회 영역의 문제 해결 능력은 약화되고 오히려 갈등의 당사자가 되고 있음

- 과거와 확연히 달라진 현실 속에서 생명·생태 위기¹¹⁾ 라는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

- 절대 빈곤의 시대를 지나 빠른 성장과 물질적 풍요를 이루었으나, 사람들은 불평등과 갈등, 경쟁 속에서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심지어 스스로 생명을 내려놓고 있음
 - » 각자도생과 사생결단식 대결 구조 속에서 잠깐 한 눈 팔아도 낙오하고 도태될 수 있다는 존재론적 불안감이 특히 청년 세대를 단절과 고립, 피로, 우울감, 절망감 상태로 몰아넣고 있음
 - » 문제는 이것이 결코 우리의 국력이 약하거나 성장이 부족한 데서 생긴 현상이 아니라는 데 있음

11) ‘생명 위기’가 생명 존재의 ‘인위적 죽음(죽임)’의 문제와 생명성의 고갈로 ‘살아 있되 살아있지 않은 상태’가 되는 것을 총칭하는 말이라면, ‘생태 위기’는 생명(들)의 존재 기반이자 삶의 터전이 거주 적합성을 상실한 채 불안정해지면서 죽음과 죽임 현상을 가중, 가속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 이런 가운데 기후위기, 생물다양성 붕괴, 생태계 파괴, 자원 고갈 등의 생태 위기는 현대인들의 일상적 삶과 욕망의 구조와 밀접히 연결되어 증폭되면서, 인간과 비인간 존재 전체의 안녕과 지구 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음

» 성인 우울증상 유병률이 2017년 2.7%에서 2025년 3.4%, 2035년에는 약 4.3% 수준으로 계속 증가 추세에 있음. 여기에 기후·생태 위기로 인류의 미래가 사라지고 있다는 두려움과 이런 흐름을 막아내기 어렵다는 무력감, 상실감, 불안감은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기후 우울증'(Climate Depression)을 유발·확산시키고 있음

- 인간 중심(인간 예외주의) 문명에서 생명·생태 가치를 기본으로 한 문명으로의 전환이 시대적 과제로 등장하였다.

- 생명·생태 위기의 핵심에는 인간을 포함한 생명 존재들을 구별·서열화하고, 상대적으로 '무가치'하다고 판단되는 존재들의 고통·죽음·죽임에 대한 무감각과 무책임이 자리하고 있음

» 대량멸종 사태에 침묵하고, 중동 지역의 대량 살육 전쟁 상황에도 우리의 관심을 유가와 주식, 부동산 관련 지표 변동에 더 쏠리도록 만드는 지금의 현실이 대표적

- 결국 생명·생태 가치를 지속가능한 미래로 가는 열쇳말로 삼아, 문제의 원인을 밖으로 돌리기보다 우리 스스로에 대한 깊은 성찰의 기회로 삼을 필요

» 오늘날 생명·생태 문제는 단순히 보존, 보호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생산·소비·생활양식, 사회 운영 및 민주적 의사결정의 원리를 새롭게 하여 공존·공생·상생의 문명의 길을 열어가는 가치 기준으로 삼을 필요가 있음

5. 살펴보기(2) - 생명·생태 위기에 내재된 근대적 시간성의 균열과 충돌

- 지금은 생태적 맥락과 조건 자체가 통째로 바뀌고 있는 시대인데, 사람들은 여전히 근대적 '시계 시간'(clock time)을 바탕으로 관성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하고 있다.

- 시간에 대한 인식과 운용 방식은 시대에 따라 변해옴

» 산업혁명 이전: 농업 시간, 계절 시간, 종교 시간, 지역 공동체 시간 등 다양한 시간들이 함께 존재

» 근대 사회: 다양한 시간들을 하나로 통합하는 거대 프로젝트가 진행되면서 인간 삶을 하나의 균일한 시간 체계 속에 편입시킴 (달력, 표준시, 철도·공장 시간, 국가 시간 등)

» 현재 : 서로 다른 복수의 시간들이 공존하며 충돌하는 시대 (지질학적 시간, 생물학적 시간, 역사적 시간, 기술적 시간, 정치적 시간, 기후 시간, 디지털 시간 등)

- 특히, 지금 우리는 즉각적 성과, 빠른 반응, 단기 효율을 우선하는 ‘단기적 시간성’이 구조화된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정치】

» 선거 중심 정치(4-5년 주기, 승자독식 구조) 체계는 차기 선거의 승리를 위해 대중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지지율)를 목표로 할 수밖에 없음.(포퓰리즘 정치, SNS 정치, 실시간 여론조사와 여론 추수 정치 등)

» 이런 상황에서는 기후 정책처럼 부담은 현재 세대가 지는데 혜택은 미래에 나타나는 의제를 책임 있게 다루지 못함

【경제】

» 주주자본주의의 사활을 건 경쟁 구조와 자본의 빠른 수익률로 우위를 확보하는 전략(분기별 실적, 주주 가치 극대화, 금융시장 초단기화, 부동산 시장 단기 투기화 등)은 지속 불가능성을 확대 심화시킴

» 플랫폼 경제, AI 기반 경제는 이런 경향을 더욱 확대시킬 가능성이 높음

【언론】

» 초·분·시간 단위로 생산·유통·소비되는 정보, 실시간 트윗, 카드뉴스, 숏폼과 클릭 전쟁 등 미디어의 시간성 단축 경향과 알고리즘 기반 확증 편향은 단기적(근시안적) 사고를 강화시킴

» 정확성보다 속도를 우선하는 가운데 혐오 및 선동 콘텐츠 확대와 공론장의 파편화는 숙의에 기반한 깊은 성찰과 장기적 사유 기능을 약화시킴

【교육·종교】

» 즉각적 성과 창출과 경쟁력 강화, 상품화 논리가 교육·종교 영역에 침투하면서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를 통한 교육의 인격 형성 역할과 영원성·초월성에 기반한 종교의 영적 성숙 역할이 약화되고 있음

- 기후·생태 문제는 근대적 시간 체계가 위기를 맞게 된 대표적 사건으로, 인간이 진화 과정을 통해 익숙해 온 ‘시간’에 대한 인식과 질서가 기후·생태 위기로 인해 빠르게 무너지고 있다.

• 인간이 경험하는 시간 수준(하루, 계절, 생애)과 수백에서 수천만 년 단위의 심층적 시간(deep time) 지평(생태적, 지질학적, 행성적 시간 등)과의 불일치

» 기후·생태 문제에는 원인 행위(온실가스 배출 등)와 그 결과(해수면 상승, 극한 기상 현상 등)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크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명확히 규정하기도 쉽지 않아, 문제의 시급성을 대중이 즉각 인식하

고 대응하기 어려움. 그 결과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문제로 인식해 다루도록 하는 ‘지연의 정치’(politics of delay)가 작동함

» 단기주의에 기반한 시간 감각과 실천 방식은 인류세, 기후위기, 대멸종 시대를 인식, 체감하고 대응하는 것을 가로막고 있음

- 기후·생태 문제는 과거·현재·미래 시간이 얹혀 있는 가운데, 한편으로 너무 느리게, 다른 한편으로 갑자기 폭발함으로써, 기존 시간 체계로는 이해도 해결도 어려움

» 기후·생태 위기는 무기력, 우울, 체념, 상실감을 불러일으키면서, 다른 미래에 대한 상상력과 미래 감각(future feeling) 자체를 상실시킴

6. 광복 100년, 생명·생태 가치의 실현을 위한 전환의 방향과 과제들

“1945년 광복이 “잃어버린 나라를 되찾는 사건”이었다면, 2045년 광복 100년은 “새로운 나라, 새로운 문명을 만들어가는 뜻깊은 여정”이 되어야 한다.”

- 변화는 필연적이다. 다만 그 방향과 내용, 결과는 현시대 인간의 선택에 달려 있다. 그만큼 더 이상 우물쭈물할 때가 아니다.

- 안토니우 구테흐스(António Guterres) 유엔 사무총장은 작년에 열린 세계 지도자 기후 정상회의(Leaders' Summit) 총회에서의 발언을 통해,¹²⁾ 기후 위기 현실에 대한 ‘냉정한 인식’과 ‘용기 있는 선택’, 그리고 ‘힘 있는 실천’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음

“냉혹한 진실은 우리가 1.5도 이하를 유지하는 데 실패했다는 점입니다. 과학은 이제 2030년대 초반을 기점으로 1.5도 한계를 일시적으로 초과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경고합니다. ... 지난 수십 년 동안 우리는 많은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행동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이제 말이 아니라 실행의 시간입니다. 1.5도 목표를 살리기 위해 남은 시간은 단 한 세기도 채 되지 않습니다. ... 정치적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더 신속하게 함께 움직여야 합니다. 이제 협상의 시기는 지났습니다. 이제는 실행의 시기입니다.”

12) 이 회의는 25년 11월 브라질의 도시 벨렘에서 열린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 본회의에 앞서 열렸다.

(1) 심리적 낙관이나 비관을 내려놓고, 현실의 ‘한계’에 대한 근본적인 자각과 진단이 선행되어야 한다.

- “궁하면 변하고, 변하면 통하며, 통하면 오래간다”(窮則變, 變則通, 通則久)¹³⁾는 말을 전환의 관점에서 정리해 보면,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려면(久), 막힌 것을 뚫고, 끊긴 것을 연결해 순환시켜야 하며(通), 그러려면 기존 질서에 대한 총체적 변화(가치·제도·관계·방법 등)를 만들어내야 하며(變), 그 출발은 막다른 상황에 처한 현실(窮)에 대한 깊은 자각이 중요
 - » 절체절명(絶體絶命), 총체적인 난국(亂局), 내외위환(內憂外患) 등 현실의 위기감에 대한 실체적 진단과 분석이 필요. 이것을 기존의 관성, 기득권과의 절연과 포기를 위한 용기 있는 결단의 토대로 삼을 필요
- 정치·경제·사회·생태적으로 막다른 상황에 처한 현실(窮)에 대한 깊고 철저한 자각이 대전환의 출발점
 - » 생명·생태 위기 문제가 다가올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의 현실에 깊은 영향을 주는 당면 과제로 인식
 - » ‘탄소중립 2050’ 역시 25년 후 달성해야 할 목표가 아니라, 현재의 삶과 사회를 구체적으로 바꿔내야 할 전환적 과제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 (책임의 시공간적 외주화 경계)

(2) 다원화된 사회에서 제한된 시간 내에 민주적 방식으로 총체적 전환을 이끌어내려면 정치·사회·제도적 리더십 확보를 통해 열망과 역량, 지혜를 모으고 연결해 내는 ‘구심력 형성’이 매우 중요하다.

- 생명·생태 문제의 심각성은 더해가고 임계 상황은 점점 다가오는데, 이것을 견제·견인하고 역량을 모아 해결해 나갈 사회적 리더십은 부재한 것이 현실의 근본 문제
 - » 복합 갈등 속에서 민주주의 기반인 신뢰와 공감 능력이 약화되는 가운데, 각자도생의 생존 경쟁에 몰입하면서 사회적 구심력이 빠르게 약화된 결과
 - » 선진국 따라잡기 방식의 추격국가 모델의 한계는 분명한데, 이것을 대체할 합의된 국가발전 모델은 없어서 방향 감각이 상실된 상황 (강한국가 모델로는 한계)¹⁴⁾
- 불연속성과 단절, 시행착오 반복에서 벗어나 축적과 연계를 통해 전환의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리더십을 강화할 필요
 - » 전환 방향에 대한 사회적 합의, 자원의 전략적 조성 and 배분, 전환 문턱을 낮추고 부담과 저항 줄이기, 전환의 씨앗을 보호·육성·확산하고 유기적 연결시키기 등의 과제를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실현해 낼 리더십의 제도화 필요
 - » 생명·생태에 대한 공동의 가치 지향과 약속을 담은 헌장(憲章) 제정과 국가 최고 규범인 헌법(憲法)에 반영하는 개헌 등

13) 『주역周易』의 해설 문헌인 「계사전하(繫辭傳下)」에 나오는 구절이다.

14) 지금 이재명 정부는 ‘AI 3대 강국’, ‘과학기술 5대 강국’, ‘4대 제조강국’, ‘글로벌 벤처 4대 강국’, ‘방산 4대 강국’ 등 강한국가를 국정 목표로 삼고 있다.

- 정책의 호흡이 짧고 정책적 일관성과 연속성, 연계성과 통합성이 취약한 현실에서 단기주의의 부작용을 줄이고 장기주의를 정착시키기 위한 제도적 방안 마련
 - » ‘정부 위원회’ 역할 조정 및 강화(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지속가능발전위원회, 2045 미래전략위원회 등), 국회에 기후위기특별위원회를 대신할 가칭 ‘미래위원회’를 상임위원회로 설치, 헌법 개정을 통해 ‘미래위원회’를 헌법 기구로 두는 방안 등)¹⁵⁾

(3) 시민 인식의 질적 전환과 전환에 대한 폭넓은 지지기반을 마련해 내는 것이 문제 해결의 핵심이다.

- 재난이 일상화된 상황에서 충격과 부담을 함께 나누고 상호 신뢰로 인내하는 사회적 기반과 토대를 만들어내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해졌음
 - » 완충지대, 회복탄력성, 사회·생태적 공유지 확장 등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역시 이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와 공감, 지지, 참여가 있어야 실현가능함
 - » 우리 정부는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2035 NDC)를 53~61%의 범위로 정해 발표했는데,¹⁶⁾ 이것을 달성하려면 향후 10년간 지금 수준보다 더 많은 양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야 하고, 그만큼 기존의 생산과 소비, 생활양식 자체를 바꿔내야 하는 부담과 비용이 더 커지는 만큼, 실행 과정에서의 갈등과 저항을 극복해 내는 것이 중요한 과제임
 - » 탄소중립 실현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목표인 동시에 결코 쉽지 않은 과제로, 긴 안목과 인내를 갖고 실천할 수 있도록 정치, 사회적 지지 기반이 든든해야 함
- 기존의 개발·성장 체제가 만들어 놓은 ‘경로의존성’과 물질 중독, 성장 중독, 탄소 중독 등 각종 ‘중독’ 현상이 만들어낸 ‘기후 문맹’ 상태에서 벗어나 생명·생태 인식과 시간 감각을 갖춘 기후시민, 생태시민, 지구시민, 행성적 시민으로서 책임있는 역할을 해나가도록 할 필요
 - » 세계의 많은 전문가들이 향후 10년 동안 위험 감소 및 대비를 위한 가장 잠재력이 큰 접근 방식으로 “대중 인식 제고 및 교육”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¹⁷⁾ ‘기후·생태 리터러시’(climate and ecology literacy) 시민교육이 중요
 - » 대의제의 단기주의와 참여 제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숙의와 공론에 기반한 ‘시민의회’ 모

15) 장기주의 정착을 위한 제도적 방안의 구체적 내용은 정규호의 글을 참조 바람(정규호, 2026, “기후·생태헌법을 위한 ‘공공성’과 ‘장기주의’ 실현 방안”, 『환경법과 정책』 34(1): 101-127.)

16) 이 목표는 산업계와 시민사회 요구, 국제사회 권고안을 놓고 단일 목표치에 합의를 이루지 못하데 따른 것으로, 탄소중립 2050 목표 실현을 위해 전향적 해결 노력을 촉구하는 시민사회의 기대에는 많이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17) 〈2026년 글로벌 리스크 보고서〉 39쪽.

델도 주목할 필요. 다만 의사결정의 질은 의사 형성 과정에서 마련된다는 점에서, 참여와 숙의에 기반한 시민 인식 전환의 다양한 계기가 만들어질 필요

» 생명·생태 관련 공통의 과제를 놓고 전 국민이 함께 숙의하면서 집단적 학습과 성찰의 시간을 경험하는 ‘공론주간 운영’도 검토해 볼 수 있음

• 시민 인식 전환에 있어 시민사회와 언론, 종교의 전환적 역할도 중요함

» 충격적 사건(세월호 참사, 코로나19 팬데믹 등)을 통한 생명 인식을 사회적 각성으로 연결시켜내고, 독서·명상·수행 등 마음챙김(mindfulness)을 통해 ‘내면 전환’의 시간을 경험하고, 미래세대, 비인간 존재를 포함한 타자에 대한 연민·배려·책임의 마음 길러내기 등

(4) ‘시간’ 인식과 활용 능력은 전환의 중요한 실마리다. ‘미래 인식’이 희미해지는 가운데 ‘미래에 대한 상상력’으로 희망의 서사를 만들고 구체화시켜 나가자.

• 미래를 희망보다 불안과 절망의 시간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확대되고 있는데, 문제는 위기감, 공포감으로 미래에 대한 상상력을 잃어버리면 전환 자체도 어렵다는 것임

» 위기 인식이 커질수록 호흡은 가빠지고 시야는 좁아지고 판단은 성급해지는데, 여기에 극단주의가 결합하면 창조적 대안은 질식되고 파국적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더욱 커지게 됨

» 생명·생태 위기와 관련해 ‘비상사태’, ‘대멸종’ 같은 종말론적 공포감을 자극하는 방식은 사람들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권위적이고 단기적인 기술적 처방에 의존하게 만듦

• 미래는 현재 이후 다가오는 시간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현재 깊숙이 들어와 있는 미래에 대한 열망과 가능성을 ‘자각하고 실현하는 것’으로, 미래에 대한 상상력과 통찰력, 공동의 비전과 공통 감각을 바탕으로 ‘희망의 서사’를 만들고 실현해 나가는 노력이 중요

» 미래를 향한 비전을 지금 여기의 현실에서 실험하고 실현시키고자 하는 ‘예시적 정치’(prefigurative politics)¹⁸⁾가 대표적 사례로, 마을과 지역 단위의 공동체운동, 사회연대경제 활동, 풀뿌리 주민자치 활동 등이 해당됨

• 자국이익 중심주의의 영향력으로 국가 간 협력체계가 약화된 상황에서 희망의 서사 만들기과 실천은 국경을 넘어 확장적으로 펼쳐나갈 필요가 있음

» 남북 관계 역시 대결주의 청산과 평화적 공존 체계 마련은 물론, ‘서로 살림’을 필요로 하는 상생의 협력

18) 예시적 정치는 칼 보그스(Carl Boggs)가 처음 사용한 개념으로 알려져 있는데, 1960년대에 등장했다가 1990년대 들어서 국가주의를 넘어선 사회운동 차원에서 다시 주목받고 있다.(Fians, Guilherme., 2022, "Prefigurative Politics". in Stein, F.(ed), The Open Encyclopedia of Anthropology, The Cambridge Encyclopedia of Anthropology, pp. 4-5.)

관계에 대한 적극적 구상과 대안 마련이 중요 (이 과정에서 생명, 생태 의제는 중요한 연결고리 역할이 될 수 있음)

» 전 지구적 차원의 생명·생태 가치 실현과 지속가능성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하는 국가로서 한국의 비전과 역할 체계 마련 (백범 김구 선생이 소망한 나도 행복하고 남도 행복한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의 실현)

(5) 죽음의 정치를 극복하고 생명·생태 가치를 실현해 내는 새로운 정치 담론과 모델을 만들고 실현하자.

- 진보/보수, 좌/우로 나뉘어 서로 적대시하면서 세력 대결을 하는 가운데, 상대적 박탈감에 기반한 지역주의 정치와 팬덤 정치의 상당한 영향력은 단기주의와 지속불가능성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음

» 특히 산업사회와 냉전 시대의 산물인 기존의 진보/보수 담론과 정치 모델은 기후 문제를 비롯한 생명·생태 위기에 무감각, 무능력, 무책임성을 드러내고 있음

- 이제는 진보/보수, 좌/우의 낡은 이분법적 대립 구도에서 벗어나 새로운 정치 담론과 모델을 찾고 만들어 낼 필요가 있음

» 현실 정치에서 진보와 보수는 주장의 방향이 달라 보여도 ‘보다 나은 미래’라는 공통된 시간 감각을 가지고 있음. “변화하면 더 나아진다”와 “지킬 것을 지켜야 더 나아진다”는 입장 모두 미래에 대한 개선 가능성을 전제하고 있음

» 하지만 오늘날 기후·생태 위기, 저성장, 전쟁, 기술 불안, 인구 감소, 죽음 현상의 확대 등으로 미래에 대한 낙관적 믿음이 뿌리째 흔들리면서, 진보/보수의 개념 틀과 정당화 기반, 정치 지형도 달라져야 할 때임

» 새로운 시간관을 바탕으로 체질을 바꾸고 차원을 변화시키는 새로운 정치 담론과 모델이 필요함

- 생명·생태 가치 실현을 위한 전환의 새로운 정치는 기존의 진보/보수 구도 사이의 어느 중간이나 중립의 위치 잡기가 아니라 벡터 자체를 달리하는 정치로, 혐오·적대·대결 중심 정치에서 공존·상생·돌봄 중심 정치로 바꿔내는 새로운 언어와 모델, 방식이 필요

» 편가르고 배척하고 공격하고 조롱하는 ‘혐오의 정치’와 맹목적 추종과 추앙¹⁹⁾⁾에 기반한 ‘팬덤정치’에서 벗어나, 생명·생태 가치를 바탕으로 공존·공생·상생의 길을 넓혀가는 ‘살림의 정치’를 실현할 때

» 인내하고 견뎌내는 힘과 함께 살아가는 지혜를 길러내는 일, 적극적인 양보(내려놓기와 내어놓기)를 바탕으로 느슨한 돌봄과 살림의 그물망을 만들어 재난 시대에 살아갈 수 있는 토대(비밀 언덕과 안식처) 만

19)) 맹목적 믿음과 단정적 태도를 뒷받침하는 강한 ‘자기확신’(self-confidence)과 ‘우리편 편향’(myside-bias)은 지적 능력과도 상관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들기 등

- » 생명·생태 위기 현상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극한 대립과 갈등, 독선과 위선, 맹목적 추종, 기득권과 독점 등의 장벽에 가로막혀 문제 해결의 시기를 놓쳐버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광복100년 국민동행이 강조하는 ‘포용’, ‘공존’, ‘절제’, ‘대화’는 새로운 정치·사회운동과 리더십을 위한 중심적 가치로 자리잡도록 할 필요가 있음

지정토론

문명적 대전환을 위한 생명·생태 의제의 구체화와 시공간적 실천의 제언

유정길 (불교환경연대 공동대표 / 녹색불교연구소 소장)

1. 발표문의 의의와 주요 가치

본 발표문은 2045년 광복 100주년을 앞두고, 과거의 관성적 발전 모델과 근대적 시간성에 갇힌 한국 사회에 '생명·생태'라는 가치 패러다임의 전면적 전환을 촉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탁월한 시의성과 깊은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① '광복(光復)' 개념의 외연적 확장과 재정의

1945년의 광복이 식민 지배로부터의 '정치적 주권 회복'이라는 '무엇으로부터의 해방'이었다면, 2045년의 광복 100년은 인류를 넘어 모든 생명과 생태계 전체의 공존을 도모하는 '근대문명으로부터의 해방'이자 '어떤 삶과 문명을 만들 것인가'로의 대전환이어야 한다는 주장은 매우 설득력이 높습니다. 특히 3·1 독립선언서의 '공존공생권'과 백범 김구 선생의 '높은 문화의 힘'을 생태문명 개척의 정신적 자산으로 연결한 맥락은 정당하며 그 의미가 큼니다.

② 근대적 '단기 시간성'과 '지연의 정치'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

정치의 4~5년 단기 선거 주기, 자본의 분기별 실적주의, 미디어의 초·분 단위 자극 경쟁이 장기적 관점이 필수적인 기후위기 대응을 가로막는 근원적 장애물임을 정확히 짚어냈습니다. 원인과 결과의 시차가 큰 생태 위기의 특성상, 파국이 닥쳐서야 임시방편을 마련하는 '지연의 정치(politics of delay)' 메커니즘을 폭로하고 새로운 시간 감각을 요구한 점은 본 발표의 가장 강력한 이론적 기여입니다.

③ '내파(內破)'하는 사회와 각자도생 구조의 연결

물질적 풍요 속에서도 세계 최고 수준의 자살률(2024년 40대 사망원인 1위 등극)과 초저출생, 극단적 경쟁 구조, 심리적 양극화 등은 경제 성장과 민주주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생명 가치가 사회 운영 원리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구체적 지표입니다. 한국 사회의 위기를 외적 요인이 아닌 시스템 내부에서 생명력이 소진되는 '내파' 현상으로 규정하고, 이것이 기후 우울증 및 생태적 무력감과 맞물려 있음을 명확히 분석해 주셨습니다.

④ '예시적 정치(prefigurative politics)'의 전략적 함의

미래의 대안을 '지금 여기'의 일상에서 미리 실험하고 실현하는 '예시적 정치' 개념은 추상적 전환 담론을 현장의 실천으로 연결하는 핵심 고리입니다. 마을공동체운동, 사회연대경제, 풀뿌리 주민자치 등 이미 전국 곳곳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실천 사례들이 이 개념 아래 더욱 명시적으로 조명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불교·기독교·천도교 등 종교 공동체가 오랫동안 쌓아온 생명 존중과 돌봄의 실천 자원은 예시적 정치의 문화적 토대로서 향후 더 적극적으로 소환되어야 할 것입니다.

⑤ '살림의 정치'와 새로운 정치 담론

진보와 보수의 낡은 이분법을 극복하고 생명·생태 가치에 기반한 '살림의 정치'를 제안하는 부분은 이번 발표의 가장 도전적이면서도 시급한 주장입니다. 이 '살림의 정치'가 현 정치 지형에서 어떤 세력화의 경로를 가질 수 있는지, 기존 정당 정치와의 관계 설정 방향에 대한 구체적 구상이 있다면 함께 지혜를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2. 대전환의 실행을 위한 보완적 제안

발표문이 제시한 거시적 방향성과 담론의 완성도를 실천적 영역으로 견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구체적 의제들의 보완을 제안합니다.

① '공유지(Commons)' 관점과 '돌봄(Care) 사회'로의 결합 및 제도화

발표문에서 '사회·생태적 공유지'를 짧게 다루었으나, 이를 전환의 핵심 전략으로 격상해야 합니다. 기후위기와 대멸종은 대지, 물, 대기, 에너지 등 모든 생명의 '공동 자산'을 자본과 인간이 독점하고 사유화한 결과입니다. 따라서 2045년을 향한 사회적 약속에 '지구 공유지(Global Commons)의 회복'과 '공동 소유·공동 관리'

의 원칙을 명시하고, 자원과 에너지를 상품이 아닌 공유재로 다루는 법제화 방향이 보완되어야 합니다. 나아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협력과 배려를 바탕으로 한 '돌봄사회로의 전환'이 함께 강조되어야 할 것입니다.

② '사회적 상속'을 통한 부의 대물림 구조 개혁 의제 도입

청년 세대가 미래를 상상하지 못하고 '수저계급론'과 자산 격차에 절망하는 근저에는 독점적인 사적 상속 제도가 존재합니다. 부모의 자산이 자녀의 기회를 규정하는 세습 구조를 깨고, 축적된 부의 일정 부분을 사회 공동체의 자산으로 전환하는 '사회적 상속 제도'나 사회에 진출하는 청년들에게 자립 마중물을 지급하는 '청년 기초자산제' 같은 파격적인 의제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진정한 '포용과 공존'의 경제적 토대가 마련될 수 있습니다.

③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 해소를 위한 '마음행복부' 신설

영국의 경우, 국민의 14% 이상이 만성적 외로움을 느낀다는 진단 아래 2018년 세계 최초로 '외로움 담당 장관'을 신설하여 이를 국가 보건 및 복지의 영역으로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청소년 및 노인 자살률 1위, 과로사와 돌연사, 기후 우울증이 급증하는 한국 사회 역시 단순히 사회 시스템의 개선을 넘어 정신과 마음의 영역에 대한 국가적 대책이 시급합니다. 인간의 내면(마음)과 외면(환경)은 긴밀히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가칭 '마음행복부'를 신설하여 약물 처방 대신 지역사회 봉사, 예술, 여행 등을 연계하는 '사회적 처방'을 활성화하고, 도서관·공원·커뮤니티 센터 등 사회적 인프라를 관계 중심으로 재설계하며, 무한 경쟁 속 고독한 삶을 치유할 명상과 정신건강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④ 직접민주주의를 위한 '시민의회'와 비인간·미래세대를 위한 '미래심의위원회' 설치

스위스의 직접민주주의 제도나 아일랜드의 시민의회(Citizens' Assembly) 사례처럼, 공론 기구들이 도출한 합의안이 실제 국가 정책과 입법에 법적 구속력이나 연계성을 가질 수 있도록 '대의제와 숙의민주주의의 제도적 결합 방식'을 정교화해야 합니다. 또한 단기주의를 극복하고 장기적 관점의 정책을 심의하기 위해 입법·사법·행정부에 준하는 제4의 독립기구로서 '미래심의위원회'의 설치를 제안합니다. 이 기구를 통해 모든 국가 정책을 미래 세대와 비인간 존재(자연)의 관점에서 심의하고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나아가 자연의 권리와 미래 세대의 권리를 명문화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광역·기초 지자체 및 교육 현장에 미래위원회를 상설화하여 모든 사회 구성원이 상시적으로 생태적 사고를 체화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합니다.

⑤ AI·기술 전환과 생명·생태 가치의 긴장 관계 정립

발표문 3절에서 AI와 로봇 등 신기술의 기회와 위험을 언급하고 있으나, 이것이 생명·생태 가치와 어떻게 접

합되는지 논리적 연결이 다소 아쉽습니다. 특히 현 정부의 'AI 3대 강국' 등 '강한국가 모델'이 생명·생태 가치와 어떻게 길항(拮抗)하거나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해 발표자의 입장이 더 명료하게 제시되면 좋겠습니다. AI가 생태 데이터 분석, 기후 예측, 생물다양성 모니터링에 활용되는 긍정적 측면과 함께, 대규모 데이터센터가 유발하는 막대한 에너지·물 소비, 전자폐기물 증가 등 생태적 부담을 동시에 짊어냄으로써 기술에 대한 '생명·생태적 평가 준거'를 명확히 도입해야 합니다.

⑥ 성장사회에서 성숙사회로, 군비 확대가 아닌 평화 확대의 '녹색평화국가' 지향

인간의 탐욕이 아닌 필요에 근거한 성장, 자원의 무한 채굴에 의존하는 양적 성장이 아니라 인간관계와 생태적 가치를 고도화하는 '내포적 성숙' 중심으로 사회 체질을 바꾸어야 합니다. 남북 관계 역시 성장주의에 기반한 '대박 통일론'이 아니라,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의 살림과 공생을 기조로 하는 '녹색평화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최근의 군수산업 확대는 자칫 전쟁을 독려하는 군산복합체를 키울 우려가 있습니다. 군비 수출을 통해 성장하는 국가가 아니라, K-문화와 K-생태사상을 통해 인류 문명전환의 대안으로서 평화를 확대하는 국가로 나아가야 합니다. 통일과 평화의 과정 자체에 문명전환의 비전이 장착되어야 할 것입니다.

3. 향후 과제

- ① <광복100년 국민동행>은 우리 사회에서 최초로 '20년 이상의 장기주의적 관점'으로 미래를 설계하고 준비하는 뜻깊은 기구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비전은 가슴 설레는 희망을 주는 '장기적 거시 담론'이어야 함과 동시에, 그 실현을 위한 구체성은 사회적 통념을 깨는 '의외성과 파격성'을 겸비해야 합니다.
- ② 본 기구가 제안하는 '포용', '공존', '절제', '대화'의 가치가 관념적 구호에 머물지 않으려면, 이 토론회 이후 전국의 마을 공동체, 사회연대경제 영역, 풀뿌리 주민자치 현장에서 벌어지는 구체적인 '예시적 정치'의 사례들을 발굴하고 발언권을 부여하는 플랫폼으로 진화해야 할 것입니다.
- ③ 끝으로, 생명·생태 가치 중심의 전환 의제가 실질적 정책 변화로 이어지려면 '제도 안으로 들어가는 전략'과 '제도 밖에서 견인하는 전략' 사이에서 시민사회의 포지셔닝을 어떻게 설정해야 할까요? 또한, '미래 인식의 상실'을 경험하며 각자도생하고 있는 청년 세대에게 이 생명·생태 가치의 의제가 어떤 언어와 방식으로 전달될 때 실질적인 공감과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함께 토론해 보기를 기대합니다. (끝)

지정토론

청년세대와의 대화로 미래를 선취하는 기성세대의 지혜를 기대한다

한윤정 (녹색연합 공동대표)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 상실의 문제가 매우 심각하며 호모사피엔스라는 종의 미래를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라 사실에 대해서는 이제 누구나 웬만큼 알고 있다. 그렇지만 이 문제를 직시하거나 자신의 삶을 여기에 맞추거나 국가적·사회적으로 시급한 의제로 받아들이는 이들은 아직 소수에 불과하다. 발제자 정규호 선생님은 이런 격차에 대한 분석으로 ‘시간의 문제’를 지적했으며 이는 내게 매우 의미심장하게 다가왔다. 우리 시대의 특징은 “서로 다른 복수의 시간들, 즉 지질학적·생물학적·역사적·기술적·정치적 시간과 기후 시간, 디지털 시간 등이 공존하며 충돌”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각자의 속도와 리듬으로 진행되던 다양한 시간들은 이제 상호 간섭하고 교란하면서 한편으로는 절망을, 다른 한편으로는 희망을 만들어낸다. 정치의 시간과 기후의 시간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가 기후정치를 불가능하게 만드는가 하면, 디지털의 시간이 기후의 시간과 맞아떨어질 경우 반생태적인 AI 개발 총력전이 기후문제의 해법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도 적지 않다. 그렇다면 생태·생명의 가치가 사회적 준거가 되기를 원하는 우리는 어떤 시간을 상상하고 살아냄으로써 바람직한 변화를 촉진할 수 있을까? 생태사회적 시간의 감각과 리듬을 만들어내는 일은 가능할까?

정치인 안철수가 인용해서 유명해진 말(윌리엄 김슨의 SF 『뉴로맨서』에 나오는 구절)이 있다. “미래는 이미 와 있다. 단지 널리 퍼져 있지 않을 뿐이다.” 작가는 새로운 기술이나 트렌드가 모든 사람에게 동시에 도달하지는 않으며 특정 집단이나 장소에 먼저 나타난 뒤 점차 사회 전체로 확산한다는 뜻으로 이 말을 사용했다. 실제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미래에 대해서는 미래라는 명명조차 불가능하다. 미래는 문자 그대로의 의미(아직 오지 않은 것)가 아니라 이미 현재 안에 소수성으로 존재하는 어떤 것이다. 생명 가치가 준거가 되는 사회, 이를 위해 포용과 공존을 실천하는 사회 역시 소수의 입장으로나마 우리 사회 내부에 이미 존재하고 있

다. 다만 그것이 전면적으로 발현될 기회를 잡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실마리를 찾기 위해 다시 기술 이론(에버릿 로저스)을 대입해보면, 새로운 기술은 초기 소수의 수용자를 넘어 대중에게 확산되는 과정에서 캐즘(chasm: 일시적 정체 또는 단절)을 겪는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경제적·제도적·사회적 인프라 구축과 더불어 문화적 수용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전자와 후자는 순차적이기보다는 병렬적·동시다발적이지만 문화적 수용과 사회적 합의가 유형의 인프라 구축보다는 좀 더 확실한 대안임은 분명하다.

발제자 역시 생활방식과 인식의 전환, 나아가 문명전환을 위해 교육, 종교, 공론장, 희망적 서사 등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그는 또한 실천과 운동의 핵심으로서 칼 보고스의 “예시적 정치(prefigurative politics)”를 소개한다. 이는 “미래를 향한 비전을 지금 여기의 현실에서 실험하고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마을과 지역 단위의 공동체 운동, 사회연대경제 활동, 풀뿌리 주민자치 활동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좀 더 보충하자면 과거의 전통적인 혁명이나 개혁 운동은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고 믿었던 데 비해, 예시적 정치는 수단이 목적을 결정하므로 그 운동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사회의 모습이 운동의 조직 방식과 실천 속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는 개념이다. 위계질서, 착취, 권력집중을 거부하고 풀뿌리 차원의 민주주의, 참여, 평등한 인간관계가 중심이 되는 수평적 조직을 지향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모든 정치 운동에 해당하겠지만 특히 시한부 성격이 강한 기후 운동의 조급함이나 최근 분화과정(〈한겨레21〉은 최근 기후위기 대응 주체가 온실가스 감축 중심의 경제 개편론과 기후정의 중심의 체제 전환론으로 분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을 보면 더욱 중요하다.

기후·생태·생명 운동이 문화적으로 수용되고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청년운동/청년정치와 적극적으로 만나고 결합해야 할 것 같다. 현재에 소수자로 존재하는 ‘미래’세대는 예시적 성격을 갖기 때문이다. 그들을 교육한다기보다는 그들에게 천착해 변화의 실마리를 끌어내야 한다. 현재 기후·생태·생명 운동은 (민주화와 진보정치 운동의 연장 선상에서) 6070 남성들이나 (협동조합과 마을공동체 운동의 연장 선상에서) 4050 여성들이 주축을 이룬다. 여기서 2030 청년은 기성세대 운동의 가치에 공감하는 청년만이 아니다. 부모세대가 고도성장과 부동산 가격상승을 통해 얻은 부를 질시하며 주식투자에 열중하는 청년들, 정치적 의제와 경제·사회적 위상이 불일치(이른바 ‘내로남불’)하는 민주당 대신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청년들까지 고려해야 한다. 이들은 과도한 경쟁, 절차적 공정, 개인주의에 익숙한 한편으로 조직보다 개인이 중심이 되는 삶, 수평적 관계, 이념보다 실용을 앞세우는 장점이 있다. 청년세대가 광복 100주년에 바라는 국가는 공정하고 포용적인 국가인 동시에 지속 가능한 환경 국가이며 누구보다 생명 위기에 놓인 당사자이기도 하다.

광복 100주년(2045년)의 시간성을 생각해본다. 우리 사회의 짧은 호흡을 고려할 때 뜻밖의 시기상조한 호명을 통해 광복 이후 한 세기라는 시점은 현재에 투입한 미래(이미 와 있는 미래)가 되었다. 발제자는 다양한 시간들의 공존과 갈등을 이야기했는데, 그런 시간들 사이에 ‘공동체적 전망의 시간’이라는 하나의 차원이 더해

졌다. 이때쯤이면 생태·생명 가치가 준거가 되는 사회를 꿈꾸는 것은 유엔기후협약에 맞춰 2050 탄소중립을 이야기하는 것보다 훨씬 멋진 서사이다. 조상들이 그토록 지키고자 했던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이 외세의 지배와 수탈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에 의해 망가지는 걸 막아야 한다. 더구나 광복 100주년 국민동행의 최초 발기인들은 이 사명을 후속세대에게 물려줄 수밖에 없다. 어떤 유전자를 전달하고 어떻게 보듬어 양육할 것인가? 선입견 없이 청년세대와 접속해 대화하는 일은 탄소배출을 줄이고 생태계를 보전하는 일만큼이나 생태적인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지정토론

너와 나를 가르지 않는 우리나라

: 나라, 시간, 살림의 지평에서

장윤석 (녹색연구활동가)

1. 백년대계와 너도나라

광복 100주년이라뇨. 처음 소식을 전해 듣고 놀란 마음 감추기가 어려웠습니다. IMF가 한창이던 98년에 태어난 저로서는 헤아릴 수 없는 시간의 지평입니다. 이미 돌아가신 조부모들께서나 겪으셨을 1945년 광복의 시간을, 그때의 희망을 헤아리기에 저는 너무 어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이미 80여 년이 흘렀고, 곧 남은 20년이 흘러가 광복 100주년인 2045년이 온다는 이야기는……. 세어보니 만약 제가 올해 아이를 낳게 된다면, 그 아이가 고3이 되는 해이겠군요. 그야말로 “오래 살고 볼 일”입니다. 그 아이가 살아갈 세상은 어떤 모습일까요. 물에 이어 공기를 사 먹는 세상이 될까요. 후쿠시마의 주민들처럼 방사선 측량기를 늘 지니고 다니게 될까요. 지금의 우크라이나와 팔레스타인처럼 전쟁의 한복판에서 일상에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렇게 걱정하니 남은 20년이 더없이 소중하게 여겨집니다. 아마 1926년 또한 제국 열강의 나라의 명운이 바람 앞의 촛불과 같은 풍전등화의 시간이었겠지요. — 만해 한용운의 「님의 침묵」이 발간되고 조선의 마지막 임금 순종의 장례식을 기해 6·10 만세운동이 일어난 해라고 합니다. — 2026년 또한, 저희가 지금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지금, 여기’의 시간 또한 그와 같이 앞으로의 향방을 가르는 ‘골든 타임’이랄데도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핵 위기, 기후 생태 위기, AI 위기, 사회 불평등 위기 등 날마다 울리는 위기의 경종은 너무나 자주 울려 다 났아버리고 만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2045년은 아무래도 빛이 돌아온다는 ‘광복’의 원년보다, 어둠이 돌아온 ‘암복’의 원년에 가까워 보입니다. 지금처럼 광복 100주년을 기념이라도 할 수 있는 사회가 우리 앞에 살아 있을까요?

그런 점에서 “‘광복 100년’을 20년 후의 다가올 미래로 놓고 예견하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20년의 미래 시간 감각을 갖고 지금 현재의 인식과 삶의 태도, 의사결정 기준, 사회구성 원리를 바꿔내는 실천적 태도”가 필요하다는 정규호 선생님의 문제의식에 깊이 공감합니다. 기후과학에서 자주 채택하는 백캐스팅(back casting) 방법론처럼, ‘과거에서 현재로’ 미래를 예측(forecasting)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소망하는 미래를 상상하고 그 미래의 것을 — 목표, 감각, 지혜 — 거꾸로 현재로 끌어오는 마음가짐이 가장 중하다고 생각합니다. 나아가 “1945년 광복이 “잃어버린 나라를 되찾는 사건(‘무엇으로부터’ 해방의 의미)”이었다면, 2045년 광복 100년은 “새로운 나라, 새로운 문명을 만들어가는 뜻깊은 여정(어떤 삶, 사회, 문명을 만들 것인가 등 ‘무엇을 향한’ 가치 지향적 의미)”이 되어야 한다는 지점 또한 온마음으로 통감합니다.

하나 떠오르는 일화와 말이 있습니다. 군부독재가 들어서고 시대가 혼란하던 그 때 씨 함석헌 선생님은 청사진 한 장 품에 안고 홀로 이 사람 저 사람 붙잡으며 우리 이 길로 가자, 함께 가자 다독이며 다녔다고 들었습니다. 그 청사진은 이렇습니다.¹⁾ “모든 잘못의 근본 원인은 너 나를 갈라 생각하는 데 있기에” 우리는 나라를 사유함에 있어서 이러한 너 나 봄을 떠나야 합니다. 그렇게 “나라는 너 나 생각이 없고, 너도 ‘나’라 하는 데 있”습니다. “모든 것을 ‘나’라 하는 것이 나라요, 나라하는 생각”이라는 것이지요. 그로부터 몇십 년이 지났지만, 이 청사진은 저에게 소중히 건너와 제가 꿈꾸는 나라로 남아있습니다. 새 나라는 너와 나를 가르치 않고 ‘너’도 ‘나’라 하는 나라이구나. 우리가 광복 100주년을 맞아 백년대계를 준비하며 꿈꾸게 될 ‘우리나라’는 너와 나를 가르치 않는 ‘너도나라’입니다.²⁾

2. 생태적 시간관: 미래는 없다, 오직 희망만이 있을 뿐

정규호 선생님의 발제에서 단연 눈에 띄는 대목은 ‘시간’에 대한 부분입니다. 미래를 희망보다 불안과 절망의 시간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확대되며, 위기감, 공포감으로 말미암아 미래에 대한 상상력을 잃어버리고 전환 자체가 어려워질 우려를 전하고 있습니다. “시간’ 인식과 활용 능력은 전환의 중요한 실마리다. ‘미래 인식’이 희미해지는 가운데 ‘미래에 대한 상상력’으로 희망의 서사를 만들고 구체화시켜 나가자”는 제안에 반갑게 손을 맞잡고 싶습니다. 말씀처럼 우리에게겐 고정변수처럼 여겨온 ‘근대적 시계 시간’과 ‘단기적 시간성’이라는 근시

1) 함석헌, 2016[1961], 『인간혁명』, 한길사, 666쪽. “우리의 근본 잘못은 우리가 스스로 역사의 책임자 노릇을 하려 하지 않고 서서 기다리려 한 데 있다. 모든 잘못의 근본 원인은 너 나를 갈라 생각하는 데 있다. 나라의 너 나 생각이 없고, 너도 ‘나’라 하는 데 있다. 모든 것을 ‘나’라 하는 것이 나라요, 나라하는 생각이다. 그러므로 너 나 봄을 떠나지 못한 사람은 인생 구원을 말할 자격이 없고, 선을 좋아하고 악을 미워하는 정도 이상을 모르는 마음은 사회 경륜을 의논할 수가 없다. 그놈이 그놈이라 하지 말고, 이놈도 나다 하게 되어야 한다.”

2) 장윤석, 2019, 〈너도나라〉, 《씨알의 소리》.

안적인 시간의 지평을 넘어서는 장시안적 시간의 감각, 문법, 문해력이 긴요합니다.

이에 대해 20세기 중반 근대성의 폐해를 드러낸 철학자 이반 일리치(Ivan Illich)는 의미심장한 말을 던집니다. “우리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오직 희망만이 있을 뿐입니다”³⁾라고요. 그는 ‘기대’와 ‘희망’을 구분해서 사용했는데, 제도에 의해 통제된 결과를 따르는 것을 기대라고 불렀고, 우리의 힘과 능력을 믿는 것을 희망이라고 불렀습니다. 저는 이를 순환적 시간관에 기초한 생태적 희망관(혹은 희망의 생태학)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희망은 인과적이지도 평면적이지도 않고,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나은 내일”이라는 직선적 시간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머리로 생각했을 때 도무지 희망 한 점 찾을 수 없다 하더라도 그것을 포월(包越)할 수 있는 상상의 영역입니다.⁴⁾

하지만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정치생태학자 故문순홍은 생태 담론과 패러다임을 분석하며 오늘날 우리는 두 가지 경향이 공존하는 ‘그리고’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며, “이것 아니면 저것”이라는 구시대의 논리가 여전히 지배적이지만, “이것 그리고 저것”이라는 새 시대의 논리가 (느리게) 안으로 파고들고 있다고 말합니다.⁵⁾ “낡은 것은 가고 새 것은 오지 않은”이라는 정치철학자 낸시 프레이저의 저서 제목을 빌려 말하자면 “낡은 것은 가지 않고 새 것은 느리게 파고드는” 것이지요. 즉, 우리는 어제와 오늘 그리고 미래의 감각과 논리가 한 자리에 공존하는 기묘한 시대이자 어떤 분기점에 살고 있습니다.

이른테면 가깝게는 2024년 12월 3일 다시 만난 계엄을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역설적으로 1980년 5월의 광주와 연결되는 동시성을 경험합니다. 때마침 이어진 작가 한강의 “산 자가 죽은 자를 구하고, 죽은 자가 산 자를 살리는” 말처럼, 그 시공간에서 우리는 현재가 과거와 미래와 동떨어져 놓여있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감각합니다. 하지만 계엄이란 연극이 끝난 후, 되찾은 일상에서 우리는 그 연결된 시간관/감을 얼마나 감각하며 살고 있을까요. 단 한 번의 희소식도 들려오지 않은 기후 생태위기와 연이어 퍼져나가는 전쟁들은 막을 내린 적이 없는데 말이지요.

3) 이반 일리치, 2013, 권루시안 역, 『과거의 거울에 비추어』, 느린걸음.

4) 장윤석, 2024, 〈희망, 시간, 생명〉, 《사상계》 재창간 1호/통권 206호.

5) 문순홍, 2006, 『생태학의 담론』, 아르케, 40쪽. “올리히 벡은 『정치의 재발견』 서문에서 오늘 “우리들은 ‘그리고’의 시대, 즉 두 가지 경향이 공존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말한다. 료타르는 이 세계를 안으로 품어드는 세계라고 부른다. 이전에 영묘하게 둘로 구분되어 중심에 속하지 못하는 것들은 배제되고 주변화되고 타자화되었지만, 지금은 중심 세계 내 그들로 인식되고 이 안으로 품여들고 있는 것이다. 이 세계 내에서 기존 세계의 논리인 ‘이것 아니면 저것’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이미 품어들이고서 안은 ‘그리고’의 논리라는 거품들로 메워지고 있다. 밖은 존재하되 이미 안으로 파고들고 있으며, 제3세계는 존재하되 이미 제1세계 안으로 들어와 있다. 동일하게 자연은 인간 밖에 존재하는 것이되 인간 사회 안에서만 발견한다.”

3. 살림의 삼중모색: 세 가지 죽음, 세 가지 생태

이어서 정규호 선생님은 이러한 “새로운 시간관을 바탕으로 체질을 바꾸고 차원을 변화시키는 새로운 정치 담론과 모델”의 필요를 말씀하십니다. 역시 공감을 담아 ‘그리고’의 문법으로 현주소에 대한 진단과 모델을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실은 저에게 ‘우리나라’의 역사는 자랑스러운 것보다 부끄러운 면이 더 큼니다. 어느샌가 우리나라는 “수출만이 살길이다”는 구호 아래 누군가의 피 위에 서 있는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1970년대 베트남 전쟁의 한복판에서 하미와 미라이 등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이 빚어지며 비극의 서곡이 울립니다. — 오늘날에도 우리나라는 홍콩이나 인도네시아에 시위 진압용 장비를 수출하고, ‘K-방산’이라는 이름으로 세계 각지의 분쟁 전쟁 지역에 무기를 팔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에너지 전환의 면에서도 하루 속히 탈동조화해야 하는 석탄발전과 핵 발전을 저개발국에 수출하는 마지막 보부상 역할을 자임하고 있습니다. — 여기에서 우리는 어떤 비극의 악순환이자 폭력의 순환고리를 마주합니다. 전쟁이라는 아비규환의 과정에서 일어난 집단학살(genocide), 누군가를 죽이기 위해 어마무시한 양의 고엽제를 숲에 살포했던 생태학살(ecocide), 그 과정에서 가해에 가담하거나 피해에 놓인 이들의 PTSD와 자살(suicide)은 모두 참담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민간인 학살의 진상규명과 책임을 요청하는 목소리와, 고엽제 피해로 시름하는 목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유해한 세계에서 무해한 나라가 있을 수 없고, 유해한 구조에서 무해한 개인이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결코 벗어날 수 없는 세 죽음(집단학살-생태학살-자살)의 비극을 풀어나갈 살림의 길을 찾아가야 합니다.

아무래도 살림과 전환의 문제에 하나의 단일한 해(解)는 없겠습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물음에 대해, 저는 생명과 생태의 관점과 태도에서 질문을 재정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 ‘해결’이 아니라 ‘전환’입니다.⁶⁾ 정규호 선생님이 『녹색국가』에서 누차 강조하는 전환의 시너지 효과⁷⁾가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현실에서 각 수준 및 영역별로 흩어져 있는 가능성에 새롭게 의미를 부여하고 관계의 재설정과 위치의 재배치를 통해 (중략) 전환의 힘을 증폭시키”자는 제안과 일맥상통하겠습니다.⁷⁾

저는 이 요원한 문제에서 생명과 그 그물인 생태가 지혜를 선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결된 비극은 연결된 접근으로만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광복 100년의 대한민국은 생명과 생태와 환경이 최고의 가치가 되는 나라여야 한다”는 가치를 저는 이런 맥락으로 이해하고 싶습니다. 저는 여기에서故신승철 선생님께서 연구한 펠릭스 가타리(Felix Guattari)의 ‘세 가지 생태학(the three ecologies)’의 구도를 이어 말씀드리고자 합

6) 존 폴 레더락, 2016, 김가연 역, 『도덕적 상상력』, 글항아리, 참조.

7) 정규호, 2025, 『녹색국가 -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한 이론과 전략』, 모시는사람들.

니다.⁸⁾ 대개 생태를 ‘자연’과 ‘환경’ 등과 같이 고정된 단일 기표로 생각되는 경향이 있지만, 생태는 ‘에콜로지(ecology)’라는 원어와 같이 다차원적 의미, 복수적 지시대상, 다양한 개념적 연동성을 지닌 ‘복수’ 기표입니다. 그렇게 신승철 선생님은 세 가지 생태학의 마음생태, 사회생태, 자연생태라는 삼원도식을 바탕으로 환경관리주의(녹색제도주의), 사회생태주의, 근본생태주의의 사상적 접점을 모색합니다. 저는 이 세 가지 사상계(思想界)가 우리의 생태계에서 녹색전환, 기후정의, 생명평화라는 각각 뜻깊고 귀중한 흐름을 만들어 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살림의 길은 이 세 가지 뜻과 힘, 마음 사이에서 삼중모색을 통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생태’를 보다 넓고, 크고, 깊게 이해할 때 한 치 앞이 보이지 않는 듯한 어둠 속에서도 푸른 녹빛을 따라 암중모색을 해나갈 수 있다고 희망합니다.

故문순홍 故신승철 선생님을 기리며
정성과 평화를 담아
장윤석 드림

8) 장윤석, 2025. 「Resistance Against the Three Ecocides: From Vung Ang to Samcheok. Activist Research on the Road ‘We(YCEA)’ Have Taken.」, 성공회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의제 2

평화·민주주의

발제

광복 100년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평화를 위한 ‘국민동행’과 ‘세계동행’의 과제

‘세계요청’ ‘세계 선도’ ‘세계 역할’ ‘세계기여’

박명림 (연세대 교수 | 김대중도서관장 | 인간평화와 치유연구센터 소장)

세계 현실, 그리고 한국의 “세계 역할”(world role/world mission) 요청: 국민동행과 세계동행의 중첩과 병진

- 우리가 소망하는 바람직한 ‘민주주의’와 ‘평화’를 위한 대한민국 광복 100년의 요청 중의 요청은 ‘국민동행’과 ‘세계동행’이라고 할 수 있음. 두 지향 목표는 사실상 하나임. 국민동행 없는 바람직한 민주와 평화도, 세계동행 없는 바람직한 민주와 평화도 불가능하기 때문임.
- 현재 인류의 가장 심각한 현상은 ‘민주주의’와 ‘평화’의 동시 위기. 이는 현대 세계의 최초의 ‘부정적’ 조합 상황. 즉 둘 중 하나가 다른 하나를 견인하던 근대 이래 세계 진보와 발전의 결합 동학과 공식이 본격적인 분리과 해체 국면에 돌입. 요컨대 세계는 민주주의와 평화의 이중 위기에 진입. 게다가 오늘의 인류에게는 심각한 기후생태 위기도 중첩.

특별히 세계화, 자유화, 민주화 30년의 결과가 국내적으로는 압도적인 전제화(autocratizing), 우경화, 그리고 양극화, 국제적으로는 탈세계화, 자유주의 국제질서 해체, 난민증과 불평등으로 나타나는 현실은 인류의 미래에 대한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음. 세계화-자유화-민주화 및 승리주의의 절정의 시기에 탈세계화(de-globalization), 탈자유주의화(post-liberal international order. G. John Ikenberry), 탈민주화(de-democratization. S.N. Eisenstadt.)의 급속한 진행은 현대 세계사와 인류사 전체의 최고의 역설의

하나로 기록될 것이 분명.

첫째 무엇보다 세계의 민주주의는 핵심 국가들조차 거의 전부 심각한 역전과 위기에 진입. 이른바 전제화와 탈민주화를 말함. 이는 객관적인 주요 국제조사의 지표와 조사, 통계의 일치된 견해.(Economist Intelligence Unit, 2025: V-Demo 2025: Demo Finland 1993-2023.) 유럽, 북아메리카, 아시아의 주요 국가에서 심각한 우경화 내지는 전제화의 위기를 노정. 사실상의 극우 정당·정치인·정책들이 대중과 정부를 장악한 경우도 다수. 이제 민주주의의 후퇴와 비(非)자유주의체제의 득세는 일반적 현상.

둘째 민주주의 국가의 전통적인 평화 수호와 방벽 기능의 현저한 약화와 동시에, 평화에 대한 위협과 파괴 역할 점증. 특별히 세계화 및 신자유주의 선도 국가의 탈세계화와 탈자유주의화 주도는 가장 심각한 위기의 한 요인. 미중 대결과 갈등은 이제 가장 중요한 세계질서의 결정요인으로 등장. 그러나 두 세계제국 모두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GA)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에서 보듯이 이제 보편은 제국의 국익과 국가 가치의 하위 요소로 밀려남.

게다가 세계평화의 경우 오랫동안 세계 민주국가들이 우려하던 위험성 --- 즉 시진핑 체제 하 중국의 타이완 공격에 대한 비판과 경고 ---을 넘어 반대로 블라디미르 푸틴 체제의 러시아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각각 우크라이나와 이란에 대한 침공을 감행. 수정주의, 또는 현상변경 세력이라고 비판받던 중국이 단기적으로는 오히려 현상유지 세력이며 평화 수호세력이라는 역설적인 현실까지 등장. 실제로 만약 현재에 중국마저 타이완을 침공했다면 세계는 어떻게 되었을 것인가? 유럽, 중동, 동아시아, 그리고 러시아, 미국, 중국이 모두 전란에 휩싸이는 초유의 세계상황에 직면하고 말았을 것. 그러나 민주주의는 물론, 중국이 보편평화의 인류 가치와 역할책임을 담당할 가능성은 거의 없음.

셋째 또 하나의 심각한 문제는 세계의 구(舊) 자유세력, 민주진영, 또는 평화진영 내부의 분열과 대립. 세계화와 함께 등장하였던 대서양분열(the trans-Atlantic divide/the divided West, J. Habermas)은 이제 관념과 진단을 넘어 명백한 현실로 대두. 이는 향후 세계질서에는 미·중 사이의 태평양 갈등(the trans-Pacific conflict) 못지않은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 따라서 오늘의 시점에서 세계민주주의와 평화를 위해 미·중 갈등 못지않게 심각한 문제는 구(舊) 자유주의 세력의 위축과 내부 갈등. 심지어 서구없음(Westlessness)과 서구패망의 문제까지 진지하게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Munich Security Conference, 2020)

- 이러한 세계상황과 세계현실에서 광복 100년을 향해 오늘과 내일의 한국은 자신과 세계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세계의 민주주의와 평화를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고래로 확인된 역사법칙에 따르면 문명 대전환기에 기존 중심은 항상 보편을 보지도 유지하지도 만들지도 못함. 그것은 언제나 경계국가와 경

계지역에서 솟아오르고 빚어짐. 경계는 기존 문명과 문명, 제국과 제국, 가치와 가치의 접촉과 교류와 겹침의 교량이자 가교요, 전방이자 중심이기 때문에 언제나 새 표준과 새 가치와 새 문명 창출의 선도 역할을 수행해옴.

인류문명 형성과 대결과 변천의 네 번째 기축이 ‘오리엔트 지방’, ‘지중해’, ‘대서양’, ‘태평양’으로 이동해온 미중 대결 시대에 그 미중 대결의 정중앙인 대한민국은 광복 100년을 맞아 자기를 넘어 왜 세계 역할과 세계 소명을 요청받고 있으며, 과연 어떻게 하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가?

“국민동행”은 그 출발이며, “세계동행”은 그 귀결이 될 것임. “제대로 된 민주주의”는 그 필요조건이며 “정의로운 평화”는 그 충분조건이 될 것임. 과거의 성취는 현실과 미래 요청의 근거가 된다. 한국은 충분히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 사료된다. 세계의 요청(Postulate)은 곧 개별과 도덕을 넘어 마땅히 경계의 새 보편과 새 주체에 의해 추구되고 달성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Immanuel Kant)

한국의 민주주의와 평화 경로의 ‘세계위치’ ‘세계역할’과 ‘세계기여’ 출발과 양태

- 초기 광복 시기와 세계질서/세계대결의 소우주(microcosm) : 한국은 두 개의 전체주의 사이에서 일종의 부분적 민주주의, 방어적/전투적 민주주의(wehrhafte/streitbare Demokratie. Karl Loewenstein)로서 반공 권위주의 국가를 건설. 세계 진영대결이 현실인 조건에서 경계국가로서 ‘국제적으로는’ 불가피한 서방정책.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전후 11개의 연합점령대상국가(독일, 이탈리아, 일본, 핀란드, 오스트리아, 한국, 베트남, 중국, 헝가리, 루마니아, 불가리아)를 정밀 비교할 때 내부의 연합·연립·통합을 통해 분할점령과 분단의 위기를 극복한 사례들(핀란드,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일본, 헝가리. 후에는 독일)에는 현저히 부족. 외려 격렬한 내부 진영충돌을 통해 세계대결과 세계충돌을 앞서나가며 세계냉전의 세계분단과 세계열전화, 그리고 세계평화 파괴의 한 진앙 역할을 선도.
- 당시는 일본 군국주의(militarism)와 소련 공산주의를 동시에 극복해야 하는 소명. 전자는 2차대전, 후자는 한국전쟁을 통해 세계 연합진영, 자유진영, 민주진영과 함께 극복. 국제연대와 지원을 통한 전체주의 구축과 민주주의 회복과 수호(2차대전/한국전쟁). 한국광복과 한국전쟁의 세계적 의미. 특히 냉전 시기 내내 한국은 세계 자유진영의 전방 초소이자 전초 기지 역할. 한국전쟁이, 발제자의 오랜 주장처럼, 내전과 국제전을 넘어 세계내전(global civil war)이었던 이유. 세계 두 진영의 자유와 혁명, 민주와 급진주의의 대결인 동시에 한국의 좌파와 우파, 남한과 북한의 내부 대결을 동시에 내장하고 양측이 상호 견장.

한국전쟁과 남북대결에서 한국의 패배는 세계 자유와 민주진영의 동아시아에서의 패배를 의미. 따라서 적극적으로 민주주의 수호의 세계 및 아시아 전방 초소로서 전쟁재발 방지 = 평화수호 역할 담당. 이 점은 서독과 동일. “독일의 베를린장벽에서 한국의 군사분계선까지”가 세계 사회주의 진영. 그 밖은 세계자유진영. 전자의 붕괴와 후자의 유지에 한국문제와 독일문제, 유럽평화문제와 동아시아평화문제의 가장 큰 차이가 존재. 전쟁의 유무가 가장 결정적.

특히 초기 시기 한국전쟁을 포함한 한국에서의 사태는 세계문제와 세계상황에 즉각적으로 심대한 영향. 이른바 고전적인 “세계질서형성 전쟁”으로 기능. 한국전쟁으로 인한 세계 진영 구도의 고착 및 한반도문제의 세계화, 세계중심문제화를 통한 전쟁 재발 방지와 구조적 안정화는 막대한 자기 희생을 통한 의도하지 않은 세계평화 기여.

- 세계 두 진영 사이의 세계 전방초소로서 “제도적 민주주의 수호, 실질적 권위주의 실천”의 조합이라는 초기 단계를 지나 두 번째 단계부터 한국은 세계 일반과는 다른 “민주주의로의 한국적 길”을 밟음. 즉 세계내전을 경험하고, 세계대결의 전방초소였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그러한 압력을 딛고 강력한 반독재-민주화 운동과 아래로부터의 저항을 통한 민주주의 회복과 구축을 선도한 세계 범례 역할 수행. “급속한 경제발전”과 “강력한 민주적 저항”을 병행한 특이한 사례. 이를 통해 한 세대 반 만에 약소국가-빈곤국가-권위주의 국가에서 중진국-중견국을 거쳐 선진 민주국가와 준강대국에 진입.
- 현대 민주주의의 일반 경로는 정당경쟁과 의회주의, 선거주의와 연합정치의 경로. 아니면 만성적 정치불안과 역전. 대부분 이들 둘 중의 하나. 그러나 한국은 평시에는 선거와 정당을 통해, 결정적 국면에서는 끊임 없는 시민저항을 통해 민주주의 열망과 회복력을 반복적으로 재현. 공산주의로부터 제도적 민주국가의 수호 이후 권위주의의 결정적 계기마다 1960년 4월봉기를 통한 이승만정부 전복, 1970년대 민주화 운동과 79년 부마항쟁을 통한 박정희정부 전복, 1980년대 민주화운동과 87년 6월항쟁을 통한 전두환 정부 붕괴가 전부 아래로부터의 시민저항. 권위주의체제의 연속 등장, 그리고 건국, 산업화의 업적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민주주의 회복력을 보여줌.
- 세 번의 권위주의 정부가 모두 시민저항과 민중봉기를 통해 전복되는 세계적으로도 희귀한 사례. 이러한 격렬한 갈등을 노정하면서도 한국은 경제성장과 민주주의 발전을 지속, 1988년에는 이미 당시 국제기구가 인정하듯 ‘제1세계’에 진입(IMF/IBRD 1989. Adam Przeworski). 2차대전 이후의 주권회복 국가로는 최초 사례. 지속적으로 매우 격렬한 갈등을 통한 근대성(주권, 자유, 민주주의, 시장경제, 평등, 교육, 사회, 문화)의 성취라는 특이한 경로를 실현(S.N. Eisenstadt). 갈등의 생산적 창조적 역할(Lewis Coser)을 현시한 대표적인 발전 경로이자 국가.

- 민주주의 회복 이후에는 평화 회복력과 평화적 안정을 위한 한반도문제 구조전환에 돌입. 한국전쟁을 통한 동아시아 열전의 진앙에서 동아시아 평화의 중심으로 역할 전도 추구. 남북기본합의서, 한반도비핵화공동 선언, 남북 유엔 동시 가입, 한국·동(東)유럽 - 한·소 - 한·중 수교를 주도. 전방위 국제관계를 구현. 최초의 남북정상회담, 그리고 6자회담을 통한 북한 비핵화 합의도 민주회복 이후 평화 회복력의 주요 사례들.

민주주의의 평화로의 파상(波狀)효과. 세계적 탈냉전·세계화, 그리고 미·중 협조체제(US-China Concert. US-China Symbiosis)와 맞물리면서 한국의 민주주의 회복은 동북아 역내 평화를 선도. 냉전의 진앙으로 부터 큰 전변. 그러나 한중 - 한소 수교에 조응하는 북미-북일 수교의 실패는 한반도 항구 평화의 정착에 가장 큰 실패 요인의 하나.

최근 한국의 민주주의 지표는 아시아 최선두권을 넘어 세계적으로도 선두권임.(Freedom House: UNDP: Economist Intelligence Unit). 북한과의 지속적인 대치 상태에서, 냉전시대와 탈냉전·세계화 시대를 통틀어 한국이 시민적 이니셔티브를 통해 아시아와 세계 민주화 운동과 민주주의를 선도한 것은 분명 일정한 세계역할이라고 할 수 있음.

- 한국은 민주국가, 중견국가를 거쳐 현재의 세계적 위상인 선진민주국과 준강대국(semi-great power)에 진입. 구체적인 규모, 순위, 그리고 지표를 볼 때 종합국력은 물론 경제, 무역, 산업(제조업/첨단산업 모두), 기술, 방산... 거의 모든 부문에서 명백히 국민국가 수준을 초월. 그 부분의 세계를 향한 경쟁 대상은 미국, 중국, 일본, 독일(또는 EU). 한국의 핵심국력 (GDP, 무역, 국방비) 비교는 스칸디나비아 3국이나 아프리카 55 개국 전체와 대등(아프리카와의 GDP는 일정한 차이). 교육, 수명, 건강, 인권, 민주주의는 국가별, 인구별 지표 순위에서 아시아 최고 수준이자 세계 선두권. 문화예술 부문의 한류의 세계 위상도 압도적.

그러나 자살, 저출산, 비정규직, 자영업, 남녀임금 격차, 노인 빈곤, 시위, 지역소멸, 학교소멸, 선거불비례성, 사회갈등지수 역시 선진국 중 세계 최악 수준. 따라서 빛과 어둠, 최고와 최악, 즉 한국기적(Korean Miracle. 그리고 Korean Dream, Korean Wave, Korean Model을 포함하여)과 한국참상(Korean Tragedy/Korean Disaster)이 함께 하는 일종의 한국 수수께끼(Korean Mystery/Korean Enigma/Korean Conundrum). 문제는 이러한 어둠의 지표들, 이를테면 자살, 저출산, 수도권 집중과 지역소멸, 학교소멸, 기후생태지표... 등이 민주화 이후 빛의 지표가 좋아지는 만큼 더 나빠지고 있다는 점.

특히 여러 국내·국제지표와 연구들이 보여주듯이 특이하게도 세계 최고 수준의 갈등국가 지위를 놓치지 않음. (Arend Lijphart. Ipsos, 2021. Pew Research, 2022. 국가데이터처 2025...). 시위 강도, 횡수, 지표는 외려 민주화 이전보다도 민주화 이후가 모두 더 높고 더 많고 더 넓음. 즉 더 갈등적임. 이는 국가제도(선거/정부/의회/정당/법원)를 통한 갈등의 제도화와 문제해결 기능이 현저히 약하고 부족하다는 방증임. (줄저.

근간 <<인간국가의 조건>>). 헌법개혁을 포함해 광복 100년을 향한 필수적인 과제의 하나가 제도혁파와 혁신이라는 점을 증거.

자기와 세계의 민주회복력(Democratic Resilience)과 평화회복력(Peace Resilience)을 위한 한국의 ‘세계소명’과 ‘세계역할책임’

- 세계화, 자유화, 민주화 30년의 결과는 인류의 인간성(humanity), 민주주의, 평화의 측면에서 매우 우려스러움. 이러한 결정적 시점에서 동아시아와 세계의 민주주의와 평화를 선도해온 한국의 역할과 책임은 강조할 필요도 없음. 한국과 세계, 이론과 실천의 두 측면에서 이제 한국의 경로와 모델을 통합하고 표상하는 세계모범을 제시할 필요성이 절실함.
- 세계적 우경화 속에서도 한국에서는 최근의 ‘헌법위반 정부 둘’을 대규모 시민저항과 의회표결과 헌법재판소 판결을 통해 탄핵에 성공함(2016/17, 2024/25). 한국은 (강한 반공 보수주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극우의 정치적 대표성을 차단하는 동시에 집합적 시민참여를 통한 민주주의 회복력의 반복은 좋으나, 최고 수준의 갈등을 완화할 정치적 리더십과, 연립과 연합이 가능한 제도적 기제의 마련이 필수적임. 특히 정부 교체에 따른 심각한 정책적 단절의 극복도 필수임. 결국 일반적 정당모델과 한국의 시민모델의 결합을 통한 대안의 통합적 구축은 오늘의 세계 위기를 넘기 위해 매우 중요함.
- 평화회복력의 과제는 ‘공화적 평화’가 해법임. 이것은 이론과 현실에서 현재까지는 인류의 가장 정확한 검증된 경로임.(Montesquieu, I. Kant, Spinoza, David Hume, James Madison....) 이것이 현재에는 ‘민주적 평화’론으로 오독되고 있으나, 위의 선현들이 통찰하였듯 기실 대내 평화·연합과 대외 공존·평화는 분리되기 어려움. 즉 평화는 민주주의의 산물이라기보다는 공화주의의 산물임. 근대 이후 민주공화국 건설의 알파와 오메가는 내외 평화의 동시 구축이었음.

이렇게 볼 때 한국에 한정할 경우 중요한 세 가지 요체가 존재함. 즉 상호 인정과 공존이 내외 평화의 요체라고 할 때, 대내의 경우 최고 갈등을 초래하는 진영대결을 넘는 대화·타협, 국정 연속성을 절대적으로 강화해야하며, 대외의 경우 바른 두 국가론의 정립과, 미중 대결의 한반도의 삼투를 방지하는 것이 핵심임.

- 먼저 내부 차원은 민주 대 반민주와 지역갈등을 거쳐 이제 격렬한 진영대결을 중심으로 끝내 세대, 젠더, 수도권-지방, 계층 간의 격차와 갈등이 훨씬 심각해짐. 민주화 세대 특유의 관념이자 구도인 진영

대결에 매몰되어 민주화 한 세대 만에 세대, 젠더, 수도권-지방, 계층 격차와 갈등이 민주주의와 함께 가장 심각하게 악화하고 있음. “저(低)성장 고(高)갈등” 사회가 고착되어가고 있는 것임.

이 4대 격차와 갈등의 해소에 나라의 온 자원과 역량, 열정과 관심, 제도개혁을 집중하지 않는다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음. 국가소멸과 소멸국가로 치달을 것임. 그러나 이러한 탈(脫)진영적 공공의제·공동의제·공화의제는 진영동원과 득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진영의제·민주의제·권력의제에 비해 방치·실종·악화를 반복하고 있음. 공론(空論)으로 뜨겁게 타오르기만 하는 동안 아무런 힘도 관심도 실리지 않게 됨으로써, 진영의제·민주의제·권력의제에 비해 공공의제·공화의제·국가의제가 장기 압살되는 전형적인 “의제 증류 현상”과 “증발현상”에 직면. 쇠락국가·소멸국가의 고전적 진행 행태요 경로임.

- 한반도 차원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지속해오고 있는 2023년 이후 현재까지의 ‘두 외국론’을 부정·비판·극복하는 것은 물론, 한국 내부 보수의 한국 단독대표론과 진보의 민족통일론 역시 이론적 실천적으로 극복·결합·지양할 필요가 있음. 빌리 브란트와 독일이 서독 보수의 ‘단독대표’론(할슈타인원칙)과 동독의 ‘2 민족 - 2 외국’론을 넘어, 상호 국가성·주권성·합법성·통치성을 인정한 ‘두 국가’론을 정립하여 이후 ‘공존’(현재)과 ‘통일’(미래)의 두 목표와 가치를 전부 평화적으로 성취하였듯이 한국 역시 마땅히 그러해야함.

그러나 한국은 독일 통일 당시에도 그것을 ‘민주 통일’, ‘평화 통일’, ‘점진 통일’, ‘동독 주도 통일’의 측면은 보지 못한 채, ‘흡수통일’ 측면 하나만을 갖고 오독하였듯이, 이번에는 다시 조선(북한)의 대(對)한국 근본 원칙인 ‘두 외국론’을 마치 ‘두 국가론’인 것처럼 심각하게 오독하고 있음. 발표와 보도를 통해 볼 때 이러한 오독은 한국의 정부당국, 학계, 시민단체, 언론 모두 동일함.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통일’에서 ‘반(反)통일’로의 전면적인 전환은, 2023년에는 한국을 ‘적대’ ‘군사’ ‘영토평정’의 대상으로 보았다는 점에서 두 국가론이 전혀 아니며, 최근 공개된 2026년 3월의 헌법은 한국과 조선의 경계를 ‘중국 및 러시아와의 국경’과 동일하게 간주하고 있다는 점에서 역시 ‘두 국가론’이 아니라 ‘두 외국론’이라고 할 수 있음. 조선은 한국을 중국 및 러시아와 동일하게 ‘외국’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임.

- 따라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근 대한(對韓) 원칙 천명은, 일관된 ‘두 외국론’이지, ‘두 국가론’과는 전혀 다르다고 할 수 있음. 두 국가론은 안정적이고 공고한 평화 공존을 위해 국가성·주권성·영토성·합법성·대표성을 인정하고 수용하지만, 두 외국론처럼 미래 통일의 내적 상호적 근거와 가능성마저 완전 박탈하고 제거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임. 게다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자유, 평등, 인권, 자율, 공화의 최소한의 민주성과 정당성, 보편성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평화와 공존을 위한 국가성과 주권성의 인정을 넘는 포용과 환대는 난망함. 외려 비판적 접근이 필수적임. 한국은 항구적인 한반도평화를 통한 동아시아평화와 세계평화에의 기여를 위해, 한반도에 내부의 단독대표론과 민족통일론, 그리고 조선의 두 외국론을 넘어 두

국가론을 확고하게 정착시킬 필요가 절실함. 먼저, 조선의 두 외국론에 대한 강력한 비판과 부정 없이 이는 가능하지 않음.

- 광복 이후 대한민국은 대략 ‘권위주의 국가’ 절반, ‘민주국가’ 절반을 경험. 이제 광복 100년을 향한 시간은 진정한 ‘민주공화국’이 되도록, 함께 가슴을 열고 열과 성을 다해, 전심전력으로 세대와 세대, 여성과 남성, 지역과 지역, 진보와 보수가 함께 준비하고 함께 추진할 필요 절실.

포용, 공존, 절제를 통해 광복 100년의 잔칫상에는 세대와 세대, 젠더와 젠더, 수도권과 지방, 계층과 계층, 진영과 진영을 넘어 함께 민주와 공화, 자유와 평등, 정의와 관용, 자율과 창의, 복지와 형평, 내부평화와 세계평화가 온 누리에 차고 넘치는 인간국가, 모범국가, 세계국가, 보편국가를 만들어야 하지 않나? 이것이야말로 우리 모두가 후대와 나라를 위해 다시 들매끈을 동여매고 숙연히 우리의 피와 땀을 바쳐야 할 숭고한 과제가 아닌가?

- 거듭 강조한 대로 평화는 내부 평화를 통한 항구적 한반도평화 구축과 세계평화 선도가 요체. 대내 평화[대화·연합·공화]와 대외 평화[공존·화해·안정]의 상호 파상(波狀) 효과 -- 최고 수준의 내부 타협과 민주공화는 밖으로는 화해와 공존·평화로 연결. 이른바 대내 화합과 대외 평화의 연결.(*Concordia Domi Poris Pax.*) 국민동행(*Concordia Domi*)과 세계동행(*Poris Pax*). 전후 한국의 경로는 민주주의 회복과 평화 회복의 동시 성공을 통해 부족한대로 ‘세계역할’과 ‘세계기여’를 보여준 한 대표적인 사례.
- 미중갈등의 단순한 한반도 삼투의 저지를 넘어, 경계의 준강대국 한국의 역할을 통한 두 제국의 동아시아 평화로의 안내와 견인 역할을 감당해야 함. 대륙과 해양, 이념과 이념, 제국과 제국, 문명과 문명의 가장 대표적인 경계국가로서 한국은 과거에 자기희생을 통해 이러한 보편적 역할을 담당해 옴. 3.1운동과 동서연결, 한국전쟁과 세계질서 주조, 서울올림픽과 냉전해체..... 가치와 현실에서 이들의 보편적 세계역할과 세계 기여는 너무도 확고함. 반도체, 조선, 기술, 특허, 한류에서 이제 한국의 세계연결과 세계공존, 세계평화의 선도는 명백함. 이제는 과거와 같은 자기 희생이 아닌, 내부의 바람직한 민주공화국을 통한 경계의 세계 준강대국으로서 세계역할책임(stewardship)을 감당할 때임, 마땅히 그러해야함.

지정토론

광복 100년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평화를 위한 국민동행과 세계동행의 과제

박은정 (이화여대 명예교수)

- 광복 100년 동행 의제를 국민동행에서 세계동행 차원으로 넓힌 비전속에서 우리- 가 걸어온 길과 앞으로 나아갈 길을 큰 그림으로 짚어 주신 발제에 깊이 감사함. - 평화와 민주주의가 그 토대에서부터 위협받고 있는 이 위기시대가 불평등 심화, 양- 극화, 생태 파괴, 팬데믹, 전쟁, AI 격차 등 대내외의 경계를 거의 무의미하게 만드- 는 만큼, 우리 안의 동행 의제와 세계와 함께하는 동행 의제가 현실진단에 있어서- 나 방향제시에 있어서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서도 발제 내용들은 시사해- 주는 바가 많다고 생각함. 다만, 토론자는 많은 부분에서 발제자의 의견을 지지하- 면서 이 자리에서는 우리 안의 동행 문제에 좀 더 무게를 두고 토론에 임하고자 - 함. 과거 우리가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정치, 경제, 문화면에서 우리 보다 앞선 - 나라를 벤치마킹했던 것을 떠올리면, 이제 우리가 우리 안의 동행에 모범을 보인다- 면 세계는 자연히 우리의 제도, 문화, 그리고 우리가 사회갈등을 풀어나가는 방식- 에 관심을 가지고 배우고자 할 것이며 그런 식으로 우리는 세계동행에 기여할 것임.
- 발제자가 지적한 대로 지난 80년은 빛과 동시에 그림자를 던진 세월이었음. 화염- 병에서 응원봉에 이르는 “권위주의 40년, 민주주의 40년” 세월 동안 한편으로 권위- 주의 하의 사회통제와 자본집중을 통한 ‘근대화’로 이룬 성장의 과정에도, 다른 한- 편으로 역동적인 시민사회운동을 통한 ‘민주화’로 이룬 헌정체제 안에도 빛이 있는- 가 하면 그림자 또한 짙게 퍼져 있음.
- ‘광복 100년 국민동행’이 내세운 ‘포용과 공존’ 그리고 ‘절제와 대화’는 정치, 경- 제, 문화 전반에 걸쳐 그림자를 걷어내고 함께 살고 같이 가는 진정한 민주주의와 - 평화의 토양을 만들자는 제안일 것임. 이러한 문제의식에 동참하면서 발제자가 강- 조한 민주회복력과 평화회복력을 위한 대한민국의 역할책임과 잠재력을 염두에 두- 고 몇 가지 소박한 전제를 살펴보고자 함.

- 우선 발제자가 말한 대로, 우리사회에서 특히 민주화 이후 각종 지표상으로 볼 - 때 삶의 질이 더 악화되었다는 점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음. 앞서도 지적했지만 - 불평등 심화, 극단적 진영갈등, 포퓰리즘, 지역소멸위기, 저출생, 돌봄 위기, 생태파- 괴 등으로 ‘탈민주화’와 ‘탈인간화’가 중첩되는 파시즘의 징후까지 나타나면서 분- 배의 불균형 문제를 넘어 인간적 사회적 존엄마저 위협받고 있음. 이런 가운데 현- 실정치권과 시민사회진영 어느 쪽도 문제해결 능력을 상실한 것으로 보임. 장기적- 인 전망은 불확실한 가운데 저출생, 연금, 기후 등 장기미래의제들은 논의의 활력- 을 잃어가고, 반면 단기과제들은 특정 프레임에 쫓겨져 진영대립구도를 벗어나지 - 못한 채, ‘새로운 정치의 출발’을 의미해야 할 입법마저 정쟁의 무기로 전락하고 있음.
- 우선 우리 사회에서 정치의 의미가 지나치게 협소화 되어 있는 점을 지적하고자 - 함. 지금은 정치가 시민들의 대화에서 거의 배제된 지경이며, 공동체 성원 모두에- 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들에 대한 결정이 소수의 수중에 집중되어 있는 현실을 비판- 하면서도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직업정치인이 되는 수밖에 없다는 소극적- 인 생각에 머물게 됨. “정치가 잘 되어야 한다.”고 할 때의 그런 ‘좋은 정치’를 위- 해서는 직업정치인만으로는 부족하며 ‘좋은 시민’들이 참여함으로써 좋은 정치가 만- 들어진다고 생각함.
- 이런 관점에서 민주헌정의 새로운 의사결정 원리를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한다고 - 생각함. 지금의 대의민주주의는 실질적으로는 과두제라고 볼 수밖에 없음. 선거에서- 의 대표성 왜곡, 새로운 정치세력의 진입을 차단하는 정당제도, 국회와 사법부에 - 비해 비대한 대통령 권한, 국민발안 등 참여 제한..... 현재로서는 새로운 의제들이 - 그때그때 정치 안으로 들어오고, 이를 발판으로 발제자의 말대로 다양한 방식으로 - 내부 연합과 협치를 이루는 일이 제도의 한계로 불가능해 보임.
- 이와 관련하여 분권과 협치에 지향점을 맞춘 헌정 개혁과 국민대표성을 확보할 - 수 있는 선거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선거법/정당법/국회법 등은 모두 현- 정관련 법률들로서 헌법 개정논의의 연장선에 놓임.) 최근 독일에서 극우정당이 - 30%에 육박하는 1위의 지지를 얻었다는데, 이민, 치안, 고용 등 객관적 지표는 나- 빠지지 않았거나 오히려 회복되었음에도 이런 결과가 나온데 대해서 현실보다는 체- 감이,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성정치에 대한 신뢰고갈이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자- 기절제와 포용의 정치가 실종된 우리 정치권이 깊이 새겨야 할 것임.
- 우리 헌정 위기 때마다 나오는 논쟁 즉 제도의 문제냐? 운영(문화)의 문제냐?에 - 대해서는 둘을 항상 연관시켜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함. 많은 제도적 이론적 쟁점들- 은 실천적으로 보면 결국 얼마만큼 사람들 사이에서, 기관과 기관들 사이에서 협조- 하고 노력하느냐의 문제임. 진부한 말 같지만 아무리 좋은 의도의 각종 개혁도 해- 당 구성원들이 협조하고 그 제도의 취지에 맞게 운영하도록 노력해야 성공할 수 있음.

- 앞에서 좋은 시민들의 참여가 좋은 정치를 만든다고 말한 바 있음. 이와 관련하- 여 헌법 개정이나 선거제도 개혁 등 민주헌정 관련 주제에서는 주권자의 참여를 보장하는 절차의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공론화위원회나 시민회의 등, 대의민- 주주의를 보완하는 온건한 형태의 민주모델 제도화). 또 같은 맥락에서 직업정치인- 들이 모이는 여의도 공간을 넘는 ‘좋은 공간’도 필요함. 일상 가까운 곳에서 견해가 - 다른 사람들이 마주하여 체험 속에서 포용하고 절제하고 대화하는 미덕을 익힐 기- 회를 갖게 하는 좋은 공공 공간! 이를테면 쾌적한 공원, 아담한 광장, 문화센터 등 - 매력적인 공공장소를 늘이는 일은 시민들의 힐링을 넘어 민주주의를 위해서도 필요- 하고, 극우담론에서 청년들을 구해내는 데도 기여하리라 생각함.

지정토론

청년세대의 고독과 다음 단계의 민주주의

박준규 (한반도청년미래포럼 창립자)

■ 정치적 양극화만큼 깊은 것은 청년세대의 고독이다.

오늘날 청년세대의 정치적 언어는 점점 더 거칠어지고 있다. 누군가는 공정을 이야기하고, 누군가는 차별을 말한다. 누군가는 평화를 강조하고, 또 다른 누군가는 안보를 이야기한다. 그러나 서로 다른 진영과 이념의 언어 아래에서 오늘의 청년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감정이 있다면, 그것은 ‘고독’일 것이다.

과거의 청년들은 가난했지만 미래에 대한 희망과 기대를 품을 수 있었다. 열심히 살아가면 삶이 나아질 것이라는 믿음, 공동체가 함께 성장할 것이라는 감각이 존재했다. 하지만 오늘날의 2030 청년들은 성장과 희망보다 생존과 불안을 먼저 배운 세대가 되었다.

청년세대는 과거 어느 세대보다 많은 시스템적 연결 속에 살아가지만, 동시에 가장 깊은 단절을 경험하는 세대이기도 하다. 취업과 주거, 경쟁과 생존의 압박 속에서 청년들은 끊임없이 자신을 증명해야 하는 현실에 놓여 있다. 그 과정에서 미래에 대한 기대보다 불안이, 연대보다 고립이 더욱 익숙한 감정으로 자리 잡고 있다.

■ 정치는 청년의 불안에 충분히 응답하지 못했다.

청년세대의 고독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불안정한 사회구조와 악화된 공동체, 그리고 미래에 대한 전망의 상실이 만들어낸 시대적 현상이다.

그러나 정치는 이러한 청년들의 불안을 충분히 설명하거나 위로하지 못했다. 오히려 청년은 보수와 진보, 남

성과 여성, 지역과 계층이라는 정치적 구분 속에서 해석되어 왔다. 물론 이러한 논의 역시 중요하다. 하지만 청년세대가 경험하는 깊은 상실감과 고립감은 특정 진영의 언어만으로 설명될 수 없다. 그 결과 정치는 청년들에게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공간이 아니라, 서로를 규정하고 대립하는 공간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오늘날 많은 청년들이 극단적인 정치적 언어에 쉽게 흔들리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단순히 특정 이념을 맹신해서라기보다, 자신을 이해해줄 공동체를 갈 길 잃은 사람처럼 찾아헤매이기 때문이다. 특히 온라인 공간에서의 과격한 분노와 냉소, 혐오와 조롱의 문화 역시 결국은 서로 연결되지 못한 세대의 외로움이 뒤튼 방식으로 표출되는 현상일 수 있다.

■ 평화와 민주주의는 청년의 삶과 연결될 때 의미를 가진다.

한반도를 둘러싼 평화 담론 역시 이러한 거리감에서 자유롭지 않다. 기성세대에게 평화와 통일은 역사적 경험과 연결된 중요한 과제였지만, 오늘날 많은 청년들에게 그것은 다소 추상적이고 먼 이야기로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다.

이는 청년세대가 평화의 가치를 외면해서가 아니다. 오히려 청년들은 지금 자신의 삶을 지켜내기 위해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다. 미래에 대한 불안이 일상이 된 상황에서 거대한 국가 담론이 현실의 언어로 다가오기 어려운 것이다.

청년 세대가 공동체와 공공의 가치 자체를 포기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청년들은 그 어느 세대보다도 ‘진짜 연결’을 갈망하고 있다. 따라서 평화와 민주주의 역시 청년들의 삶과 연결되는 방식으로 재해석될 필요가 있다. 평화는 단순히 갈등이 없는 상태를 넘어 미래를 계획할 수 있는 안정감이어야 하며, 민주주의는 제도적 절차를 넘어 시민이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감각을 회복하는 과정이어야 한다.

■ 다음 단계의 민주주의는 이해와 회복의 민주주의여야 한다.

오늘날 한국 사회가 청년세대를 바라볼 때 필요한 것은 이들이 어느 진영에 속해 있는지를 묻는 일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왜 이토록 많은 청년들이 지치고 외로운 세대가 되었는지를 이해하는 일이다.

청년 세대의 고독은 개인의 나약함이 아니다. 그것은 불안정한 시대와 과열된 경쟁, 무너진 공동체 속에서 형

성된 시대적 감정이다. 청년들의 발목을 잡는 시대정신을 청년들 스스로 새로운 어젠다로 해결해 나가야 하며 전 세대들이 국가의 미래의 주축인 청년들과 힘을 합해야 한다. 그렇기에 우리 사회가 추구해야 할 민주주의 역시 상대 진영을 이기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서로의 불안과 고통을 이해하려는 민주주의여야 한다.

광복 100주년을 향해 나아가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큰 적대와 진영 대결이 아니다. 서로의 불안과 고통을 이해하고 다시 신뢰를 회복하는 사회적 노력이다. 그리고 그 출발점은 상대를 아군과 적군으로 나누기보다,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시민, 서로를 ‘온전한 인간 그 자체’로 바라보는 데 있다. 현 사회에서 결핍되어 있는 온전한 인간성에 대한 인정과 포용을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 포용과 공존은 공동체 회복에서 시작된다.

청년세대가 바라는 것은 특정 이념의 승리가 아니다. 서로를 끊임없이 규정하고 배제하는 사회가 아니라, 다시 사람을 믿을 수 있는 공동체다.

포용과 공존, 그리고 절제와 대화라는 가치 역시 결국 공동체 회복의 과정 속에서 실현될 수 있다. 광복 100주년을 향해 나아가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경제적 성장이나 제도적 발전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서로의 불안과 고통을 이해하고 함께 미래를 상상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 그것이 오늘날 평화와 민주주의가 지향해야 할 가치이자 대한민국이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가장 중요한 역량일 것이다.

MEMO

‘광복100년 국민동행’ 제안문

통합과 희망의 대한민국

‘포용’과 ‘공존’으로 여는 지속가능한 미래

‘광복100년 국민동행’을 제안하며

오늘 우리는 1919년 3월 1일, 남과 북, 해외 동포, 종교와 이념, 세대와 계층을 넘어 한마음으로 독립의 깃발을 들었던 선조들의 숭고한 정신을 되새기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3·1운동의 이 빛나는 통합과 저항의 정신을 이어받아 다가오는 광복 100년의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어가는 엄숙한 여정을 시작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80년 전 우리는 광복을 맞았습니다. 그러나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분단과 전쟁은 나라와 겨레에 큰 고통을 가져왔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좌절을 딛고 가난을 벗어났고, 폐허 위에서 번영을 이룩했습니다. 마침내 ‘민주주의’라는 빛나는 성취도 이루어냈습니다.

식민지와 분단, 전쟁을 겪은 나라가 이처럼 빠르게 경제 발전과 민주주의 성장, 그리고 문화적 도약까지 이뤄낼 것이라고 누가 예측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제 대한민국은 누가 뭐래도

세계가 주목하는 경제·문화 강국이자 선진 민주주의 국가로 우뚝 섰습니다.

그러나 빠른 성장은 사회 곳곳에 깊은 상처와 균열을 남겼습니다. 눈부신 발전 뒤의 어두운 그림자는 이제 사회 전체에 드리우면서 나라의 내일을 암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눈부신 발전의 뒤편에서 대립과 반목, 분열과 갈등은 일상이 됐습니다. 우리 사회는 어느새 생각이 다르면 적으로 등지고, 의견이 다르면 고개를 돌리는 ‘적대와 불통의 황무지’로 바뀌고 있습니다. 말은 거칠어지고, 의견이 다르면 대화가 멈추는 곳으로 전락했습니다. 함께 살아가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믿음과 연대도 사라지고 있습니다.

살림살이의 격차는 갈수록 벌어지고 “열심히 일하면 생활이 나아진다”는 소박한 믿음은 조롱의 대상이 됐습니다. 젊은 세대에게 결혼과 출산은 희망과 기쁨이 아니라 두려움과 걱정이 됐습니다. 거세게 몰아치는 저출산과 고령화의 파도는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마저 위태롭게 하고 있습니다.

책임 통감한 기성세대,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역사 앞에 나섭니다.

책임은 전적으로 이른바 ‘원로’를 포함한 우리 기성세대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전쟁의 폐허 위에서 성장과 번영을 이끌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적대와 반목의 씨를 뿌렸고, 경쟁과 갈등이라는 원치 않는 열매를 맺었습니다. 속도와 효율만을 앞세운 성장의 논리는 ‘포용’과 ‘공존’, ‘절제’라는 공동체의 기본가치를 흔들었습니다. 우리 기성세대는 이제, 급속한 노령화의 부담을 고스란히 다음 세대에게 떠넘긴 채 불안한 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슬픈 현실 앞에서 변명의 여지 없는 역사적·사회적 책임을 통감합니다. 그리하여 오늘, 고통스러운 성찰과 깊은 참회 끝에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겨레와 역사 앞에 나섭니다.

대립과 분열의 극복, '포용'과 '공존', '절제'가 답입니다.

'포용'과 '공존', 그리고 '절제'는 단순한 구호가 아닙니다. 대립과 분열, 적대와 반목으로 벼랑 끝에 몰린 우리 사회를 살릴 유일한 대안입니다. '포용'은 서로 다른 생각과 삶의 모습을 인정하고 이해하는 너른 마음입니다. '공존'은 서로 다른 사람들끼리 서로를 이해하고 인정하며 함께 사는 태도입니다. '절제'는 하고 싶은 것을 모두 하지 않고, 넘지 말아야 할 선을 스스로 지키는 자세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것은 더 센 말이나 더 큰 목소리가 아닙니다. 상대를 밀어내지 않는 자세, 다름을 틀림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태도, 이길 수 있어도 멈출 줄 아는 마음입니다. 포용이 없는 정의는 불의와 폭력을 정당화하고, 더불어 함께 산다는 공존의 마음을 잃으면 공동체를 무너뜨립니다. 절제되지 않은 힘은 보복과 응징으로 귀결됩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 덕목을 가지고 모두가 함께 사는 길을 찾아갈 것입니다.

지구적 위기, 문명사적 전환에 맞선 책무

우리 사회의 위기는 인류가 겪고 있는 지구적 위기의 일부입니다. 기후·생태의 붕괴는 먼 미래가 아니라 눈앞의 현실로 닥쳤습니다. 인간만 예외일 수 있다는 생각은 설득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모든 생명은 서로 이어져 있는 까닭에 하나가 무너지면 모두가 죽기 마련입니다.

인공지능(AI)을 비롯한 기술의 빠른 변화는 인류의 삶과 생존 방식을 근본에서 흔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첨단 기술의 발전만으로 이 위기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삶의 속도를 돌아보고, 자연과 공존하는 새로운 기준을 세우고 그 방법을 터득해야 합니다.

이런 가운데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굳어진 세계 질서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미국 등 강대국

중심의 패권 질서에 균열이 생기고,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로 대표되는 새로운 국가들이 국제 질서의 다른 축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변화는 인류에게 닥친 문명사적 대전환을 이끌 힘이 더 이상 일부 강대국에만 있지 않다는 징후들입니다.

기후·생태 위기와 세계적 불평등, 전쟁 등의 지구적 난제를 넘어서는 일, 새로운 문명의 질서를 모색하는 일, 이 엄청난 과제가 광복 100년의 대한민국이 짊어져야 할 복된 짐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의 아픈 경험, 미래의 책임으로 이어가야 합니다.

한반도는 여전히 분단되어 있습니다. 전쟁의 기억과 긴장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평화는 저절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갈등과 대립의 아픔을 몸으로 겪어왔기에 평화와 공존의 소중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1919년 3·1 독립선언은 한 민족의 자유를 넘어 모든 인간의 존엄과 인류의 평화, 공존을 말했습니다. 광복 100년을 앞둔 지금, 우리는 이 빛나는 역사적 경험을 더 넓은 대한민국의 내일과 인류의 미래를 살리는 책임으로 이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고통스럽게 지나온 역사는 상처이자 고난이면서 동시에 지혜이자 배움인 까닭입니다.

‘광복100년 국민동행’은 특정 집단이나 이익을 위한 모임이 아닙니다. 이념과 세대를 넘어, 국민 스스로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함께 생각하고 고민하는 열린 토론 마당입니다.

합리적 보수와 개혁적 중도, 성찰적이고 상식적인 진보가 유연하게 손을 맞잡고 대한민국과 인류의 미래를 걱정하고 논의하는 공론의 장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서로를 배척하고 적대하는 일체의 언어와 행동을 거두고, 포용과 공존, 절제의 마음가짐으로 머리와 가슴을 맞댈 것입니다.

‘국민동행’은 이런 일을 하고자 합니다.

- ‘포용’과 ‘공존’, ‘절제’, 그리고 ‘대화’를 통해 서로를 밀어내지 않고 함께 살아가기 위한 사회적 약속을 다시 세운다. 새로운 형식의 시민참여형 공론의 방식으로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토론과 합의의 기본 원칙과 기준을 세우고 확산한다.
- 광복 100년의 대한민국은 생명과 생태와 환경이 최고의 가치가 되는 나라여야 한다. ‘국민동행’은 기후·생태 위기 등 지구와 인류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생명과 환경 위기를 공론화하고 이를 극복하는 새롭고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한다.
- 광복 100년의 주역인 청년세대에게 바르고 참된 대한민국의 역사를 공유하고, 이들 세대와의 상호소통을 통해 기성세대의 경험과 삶의 지혜를 우리 공동체의 가치와 덕목으로 자리 잡게 한다.
- 한반도의 평화와 공존을 남북 거래의 일상의 가치와 문화로 만들고 키운다.
- 국민동행의 향후 활동 방향과 구체적 사업 내용은 창립대회 때인 오는 8월 15일까지 세미나와 포럼, 연찬회 등을 통해 참여 인사들의 지혜와 경험, 전문적 식견을 모아 결정한다.
- 국민동행이 펼치는 사업의 논의 과정과 결과를 기록하고 축적해 국민동행의 선언과 제안의 형태로 정리해 정권과 시대를 넘어 누구나 참고할 수 있는 사회적 자산으로 남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가 오늘 제안하는 ‘광복100년 국민동행’은 과거를 기념하는 모임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다음 100년을 준비하려는, 낮고 조용하지만, 의지와 열정이 가득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분열과 대립을 넘어, 포용과 절제로 우리 사회의 균형을 다시 세우는 일은 누군가 대신해 줄 수 없는 모두의 과제입니다.

지난 광복 80년, 대한민국을 움직여 이 빛나는 성취를 이루게 한 가장 큰 힘은 언제나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서 나왔습니다. 이분들의 선택과 실천이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고 세웠습니다.

이 뜻깊은 여정에 여러분의 참여와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 주십시오.

함께 우리 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내일을 열어 주십시오.

희망찬 광복 100년을 국민 여러분이 완성해 주십시오.

2026년 3월 3일

3·1절 107주년을 기리며

광복100년 국민동행 제안자 함께

‘광복100년 국민동행’ 각계 제안자 명단

이름	직책
종교	
▲천주교	
윤공희 대주교	전 광주대교구장
정순택 대주교	서울대교구장
김희중 대주교	전 광주대교구장
옥현진 대주교	광주대교구장
이용훈 주교	수원교구장
김주영 주교	춘천교구장
김종강 주교	청주교구장
강우일 주교	전 제주교구장
▲기독교	
이해동 목사	한빛교회 원로 목사(기독교장로회)
안재웅 목사	전 YMCA 이사장(예수교장로회)
박경조 주교	전 대한성공회 서울교구장
박종화 목사	경동교회 원로 목사(기독교장로회)
손인웅 목사	덕수교회 담임 목사(예수교장로회)
김종생 목사	기독교방송사(CBS) 원로, 전 KNCC 총무
채수일 목사	크리스천아카데미 이사장, 전 한신대 총장
▲불교	
도법 스님	지리산 실상사 주지, 전 조계종 화쟁위원장
정념 스님	오대산 월정사 주지
경우 스님	고창 선운사 주지
법륜 스님	정토회 지도법사, 평화재단 이사장
▲원불교	
정인성 교무	전 남부하나재단 이사장
이선종 교무	전 서울교구장, 전 참여연대 공동대표
정상덕 교무	대전충남교구장
▲천도교	
박인준 교령	종단 대표
박남수 전 교령	전 동학민족통일회 상임 의장
학계	
김신일	서울대 명예교수, 전 교육부총리
신인령	전 이화여대 총장, 초대 국가교육회의 의장
오세정	전 서울대 총장, 전 자연과학대학 물리천문학부 교수
라종일	전 우석대 총장, 전 주일본 대사
이만열	숙명여대 명예교수, 전 국사편찬위원장
이태진	서울대 명예교수, 전 국사편찬위원장
김영호	전 유한대 총장, 전 산업자원부 장관
손봉호	고신대 석좌교수, 교회개혁실천연대 고문
이삼열	송실대 명예교수, 전 유네스코한국사무총장
양 건	한양대 명예교수, 전 한국공법학회 회장, 전 감사원장
임현진	서울대 명예교수, 전 사회과학대 학장
김태동	전 성균관대 교수, 전 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장
안경환	서울대 명예교수, 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이정우	경북대 명예교수, 전 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장
박은정	이화여대 서울대 명예교수,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박용수	전 강원대 총장

이름	직책
강정채	전 전남대 총장, 전 의과대 순환기내과 전문의
박맹수	전 원광대 총장
김태일	전 장안대 총장, 포럼 광장이후 상임 공동대표
정대화	전 상지대 총장
박명림	연세대 교수, 대화문화아카데미 이사장
문화예술	
▲문학	
구중서	문학평론가, 전 한국작가회의 이사장
이근배	시인, 전 대한민국예술원 회장
현기영	소설가, 전 한국문화예술진흥원 원장
염무웅	문학평론가, 전 창작과비평 발행인
황석영	소설가, Kaala(코리아,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문화연대 대표
안삼환	소설가, 서울대 명예교수
정희성	시인, 전 민족문학작가회의 이사장
윤정모	소설가, 전 한국작가회의 이사장
유자효	시인, 한국시인협회 회장, 전 한국방송기자클럽 회장
이경자	소설가, 전 서울문화재단 이사장
김용택	시인
김영동	국악 작곡가
언론출판	
김중배	전 문화방송(MBC) 사장
권영자	초대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위원장
임재경	전 한겨레신문 편집인
김경희	지식산업사 대표
안병찬	전 관훈클럽 총무, 한국일보 사이공 최후의 특파원
신홍범	조선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위원장
이부영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위원장
김연호	한길사 대표, 전 출판도시문화재단 이사장
조성호	자유언론실천재단 명예이사장
박화강	전 한겨레신문 부국장, 5.18 취재보도 전남매일 해직
김영철	전 한겨레신문 논설위원, 한겨레통일문화재단 초대 사무총장
김학원	후마니타스 출판그룹 대표, 전 한국출판인회의 회장
법조	
안동일	홍익법무법인 변호사, 사월회 상임 고문
김종대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 이순신학교 설립자
송두환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 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강지원	초대 청소년보호위원회 위원장, 전 한국메니페스토실천본부 상임 대표
전문직	
이근덕	전 한국공인노무사회 회장, 노무법인 유앤 대표
김릴리안	K&M 회계법인 대표, 새한신문사미디어 회장
예비역 장성	
▲육군	
박종진	예비역 육군 대장
정향래	예비역 육군 중장
최화식	예비역 육군 준장
▲해군	
임중재	예비역 해군 소장

이름	직책
김기노	예비역 해군 준장
▲공군	
최성천	예비역 공군 중장
▲해병대	
조강래	예비역 해병 소장
시민사회	
이우재	전 마사회 회장, 전 농어촌사회연구소 소장
김판수	호진플라텍 회장, 익천문화재단 김동무 공동대표
송철원	(사)현대사기록연구원 이사장
정성현	한국DMZ평화생명동산 이사장, 전 새마을운동중앙회 회장
이현배	충추사(중립화를 추진하는 사람들) 대표
김삼렬	독립유공자유족회 회장,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상임대표 의장
유영표	몽양여운형기념관 관장, 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상임 부이사장
김학민	경기아트센터 이사장
원혜영	풀무원식품 창업자, 웰다잉 문화운동 공동대표
전상직	한국주민자치중앙회 대표 회장, 한국주민자치학회 회장
여성	
신낙균	전 문화관광부 장관, 전 여성유권자연맹 회장
이정자	전 한국통일여성협의회 회장, 전 경실련 고문
차경애	전 YWCA 이사장
이현숙	전 대한적십자사 부총재
장필화	한국여성재단 이사장
정현경	미국 뉴욕 유니온신학대 대학원 교수
이미경	전 한국국제협력단(KOICA) 이사장, 전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정현백	전 여성가족부 장관, 전 참여연대 공동대표, 전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정강자	전 참여연대 공동대표, 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기후·생태	
이남국	인문운동가, '논어를 연찬하다' 저자
강대인	대화문화아카데미 원장, 바람과물연구소 소장
최 열	환경재단 이사장
이병철	생태귀농학교 교장, 전 전국귀농운동본부 이사장
정래권	초대 기후변화 대사
유정길	불교환경연대 녹색불교연구소 소장
재외동포	
정영순	대한고려인협회 회장, 인천대 외래교수
지역사회	
▲대전·충청	
김조년	한남대 명예교수, 전 '씨알의 소리' 주간
김용우	감리교 감독
김선건	충남대 명예교수
이정순	전 대전 YWCA 총무
정지강 목사	전 서울기독교서회 사장
박재묵	충남대 명예교수, 전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상임대표
이상호 목사	통일운동가
한용세	전 대전충남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이사장
김병국	청암 송건호선생기념사업회 회장

이름	직책
▲인천	
지용택	새얼문화재단 이사장, '황해문화'(계간) 발행인
호인수 신부	원로 신부, 우리신학연구소 이사장
박종열 목사	인천주거복지센터 이사장
최원식	인하대 명예교수, 문학평론가
이우재	인천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이사장
▲강원	
최기식 신부	원로 신부, 한국희망재단 이사장
임홍지 신부	춘천교구 원로 신부
유남선	강원도 독립운동기념관 추진위원장
이상진 목사	강원기독교인정의평화회의 대표
▲대구·경북	
원유술 신부	원로 신부
배한동	경북대 명예교수,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대표
김대명 목사	대구기독교교회협의회(대구NCC) 총무
▲부산·울산·경남	
송기인 신부	원로 신부, 누리벗 대표, 전 부민협 대표
김재규	누리벗 대표, 전 부민협동지회 대표
장병윤	전 국제신문 논설위원
차성환	민주누리회 운영위원장, 전 부산민주공원 관장
▲광주·전남	
정해숙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이명환	소설가, 광주전남작가회의 회장
윤광장	전 광주은빛참교사회 회장
전홍준	의사, 하나통합의원 원장
이 강	광주전남민주화운동동지회 고문
김준태	시인, 전 5.18기념재단 이사장
김희택	전 민주평통 사무처장, 전 민주화운동청년연합 부의장
이철우 목사	전 5.18기념재단 이사장, 전 광주YMCA 이사장
위인백	광주여대 법학과 교수, 한국인권교육원 원장
김승원	광주전남민주화운동동지회 상임대표
▲전북	
문정현 신부	원로 신부
문규현 신부	원로 신부
박창신 신부	원로 신부,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공동대표
백남현 목사	전북인권선교협의회 고문
이광익 목사	전북인권선교협의회 이사장
▲제주	
장정언	전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
김정기	전 서원대 총장, 제주43연구소 이사장
고충석	전 제주대 총장, 이어도연구회 이사장
김상철	제주역사문화진흥원 이사장
고희범	전 제주시 시장, 전 한겨레신문사 사장
강요배	화가

포용과 공존, 그리고 절제와 대화
「광복 100년 국민동행」

공론마당 I

광복100년 국민동행 준비위원회

주 소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45 (합동), SK리첼블 509호

이메일 : info@korea2045.org

홈페이지 : www.korea2045.org